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 벤처 · 스타트업,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로 -

2025. 12. 18.

관계부처합동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요약)

I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① **(벤처 시대의 재도래)** AI·딥테크 등 기술 대전환 국면에서 신기술 기반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새 표준으로 확산

- 전통 대기업의 안정적 성과 대신 불확실성 안에서 기회를 쟁취하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업가정신'이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컨센서스 확산

*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정신**을 강조한 피터 하윗(Peter Howitt) 등이 '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분야	기업명	비상장 기간	핵심 성공 전략	기존 선도기업
AI (언어모델)	OpenAI	'15~현재	'초거대 모델' 확장에 과감히 베팅	MS·구글
	deepseek	'23~현재	스케일 경쟁 대신 '효율성 극대화' 패러다임	오픈AI
데이터	Palantir	'03~'20	국가기관 데이터 플랫폼화	IBM
우주산업	SPACEX	'02~현재	'재사용 로켓'으로 비용 혁신	보잉·록히드
핀테크	stripe	'10~현재	개발자 친화적 온라인 결제 API	페이팔
미디어	ByteDance	'12~현재	틱톡의 초개인화 AI 추천 알고리즘	유튜브

②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美·中 패권 경쟁의 흐름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역량·자원을 결집시키는 사실상의 총력전 양상으로 확산

- 과거 벤처붐은 플랫폼·SW 혁신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국가 산업·안보에 기여하는 방산·AI·우주 등 '제조 기반 하드테크'가 부각

③ **(복합위기와 K-벤처의 기회)** 최근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지정학적 갈등, 에너지 전환 등 복합 요인이 겹치며 불확실성 장기화

- 기존 성장 공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국가 활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K-벤처·스타트업의 도전·혁신은 위기를 돌파할 최선의 성장동력

* 한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수성을 혁신 모멘텀으로 전환 K-벤처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 필요

분야	대한민국 환경		K-벤처의 기회
정치·안보	- 관세, 무역장벽, 공급망 재편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	- 제조 강국의 위상과 저력을 바탕으로 '신뢰 기반의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사회	- 저출산·초고령화 진입으로 인한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		- 돌봄, 헬스케어, 무인로봇 등 신시장 테스트베드 위치 선점
문화	- 음악·드라마·패션·게임·푸드·뷰티 등 K-컬처 산업생태계 저변 확대		- 혁신기업 전반의 글로벌 신뢰도 상승 및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회

II K-벤처 30년의 진단

1. 혁신과 도전의 여정

- ① **(산업화 고속도로 : 벤처 정신의 뿌리)** 이병철·정주영 등 1세대 기업가는 부족한 여건을 모험적 차입과 기술 모방, 해외시장 진출로 돌파
 * 정부는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독점적 사업권 등 전폭 지원하는 국가기업의 합작 프로젝트 양상
- ② **(정보화 고속도로 : 벤처 시대의 본격화)** 제조 기반으로 출발하여 IMF 위기를 극복, 인터넷·모바일 혁명을 거쳐 경제·사회 혁신과 성과 시현
 - (제조 기반의 출발^{개혁세대}) '80~'90년대 제조·HW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반도체·통신기기 등 실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中企 증명 (B2B·B2G)
 * ① 반도체 장비 : 주성엔지니어링('93, 황철주) ② 통신장비 : 다산네트웍스('93, 남민우), 휴맥스('89, 변대규) ③ 의료기기 : 메디슨('85, 이민화) ④ 전산 : 비트컴퓨터('83, 조현정)
 - (IT·인터넷 혁명^{1세대}) IMF 위기로 한계를 맞은 산업구조에 IT 중심의 혁신성장 비전을 제시하여 글로벌 인터넷 강국 도약 (B2C^{검색·포털})
 - (모바일 혁명과 플랫폼 경제^{2세대}) '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커머스·콘텐츠·금융·모빌리티 등 생활 전반 생태계 확장 (B2C^{커머스})

2. 한국 벤처생태계의 성과와 한계

- (성과) 지난 30년간 유통·금융 등 산업 구조를 혁신함은 물론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 경제 주역으로 부각

<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혁신 성과 >

대표 기업 (창업가)	NAVER	kakao	NC	coupang	toss	KRAFTON	우이인양씨클
	이해진	김범수	김택진	김범석	이승건	장병규	김봉진
주요 성과	<p>'23년 총사자수(만명) 벤처기업: 93.5, 4대그룹: 74.6</p>		<p>'23년 매출액1천억원 달성 기업(개사) 벤처전역기업: 908, 非벤처 대·중견기업: 1,767</p>		<p>'24년 국내 상장사(개사, %) 벤처이력기업: 945 (36%), 일반기업: 1,688 (64%)</p>		
	벤처기업		벤처전역기업		벤처이력기업		

- **(한계)** ①기술·②지역·③인재·④투자 네 축에서 여전히 제약이 존재해, 생태계 잠재력이 충분한 스케일업 성과로 나타나는 데 지연 발생
 - ① **(대기업 주도 딥테크)** 대기업과 중견 제조기업이 기술산업의 중심이며,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은 B2B·B2G 시장의 틈새*에서 제한적으로 활동
 - * 첫 구매자 역할의 앵커 수요가 부족하고 실증 인프라가 제한되어 연구개발·기술혁신 한계
 - ② **(수도권 중심 생태계)** 서울과 판교에 인력·자원이 집중되는 경향으로, 각 지역의 혁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격차가 심화되는 구조
 - * 다만 대전, 광주, 대구, 울산, 포항 등 5대 과기특성화대학 중심으로 혁신동력 잠재력은 충분
 - ③ **(우수 인재의 벤처·창업 기피)** 원하는 만큼 근무하고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는 근로문화가 미진하여 우수 인재의 벤처생태계 유입 제약
 - * 현재 벤처기업 재직자의 70.4%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의향 有('25.10월, 벤처기업협회)
 - ④ **(모험자본시장의 명암)** 연 벤처투자 12조원 규모의 세계 5대 벤처투자 강국이나 장기투자 토대가 취약하고 해외자본 유치는 실적 미약
 - * 글로벌 흐름은 CVC와 연기금, 국부펀드(SWF)의 자본력이 초대형 거래를 촉발하며 투자시장 주도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시사점)** 벤처 4강을 위해 기존 제도를 깨는 '비상한 혁신 전략' 필요
 - ① **기업가정신과 도전하는 벤처 문화를 핵심 경제성장 동력으로 확산**
 - * 벤처의 위대함을 국가 전체에 환기시키고, 미래세대 창업가들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환경 조성
 - ② **창업 후 유니콘을 넘어 월드클래스로 성장하는 K-빅테크 육성**
 - * (기업규모 기준 성장단계)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혁신 성장트랙) 벤처·스타트업 → 유니콘 → 데카콘 → 빅테크
 - ③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새로운 벤처시대 실현**
 - * 대기업 중심의 美日 추격형 성장모델 대신 벤처를 혁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아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재창조
- **(향후 과제)**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데카콘은
 - ①내수 의존성 극복과, ②고난도 딥테크 난제 돌파가 성과의 관건
 - * 최근 엔비디아는 26만개 이상의 최신 GPU를 주요 기업과 및 한국 정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을 발표

IV 세부 추진 과제

전략 1 기술의 혁신을 넘어 유니콘·빅테크 도약

◆ 극한의 기술혁신과 B2B·B2G 시장 개척을 꿈꾸는 「혁신 창업가」를 전폭 지원하여 AI 스타트업 1만개 육성 및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1) K-빅테크 성장 트랙 : AI 고속도로를 타고 유니콘·데카콘 도약

1 압도적 GPU 인프라 등으로 AI 스타트업 1만개 육성 과기정통부 협조

- 정부 확보 GPU(약 5만장, ~'28년)의 일정 부분을 중소·스타트업이 AI 연구·개발 등 AI 혁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 및 활용 지원
- AI·딥테크 중심*으로 스타트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TIPS 체계 개편 등 창업지원체계를 정비하여 AI 스타트업 1만개 육성(~'30)
* 「ABCDEF 6대 전략산업」 및 「12대 신산업 기술」로 재편

2 유니콘·데카콘 50개 육성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 가동 금융위 협조

- 차세대 유니콘 발굴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단계별 투자·보증 → '30년까지 총 13.5조원 지원('25~'30)
* 이후 유니콘 후보 기업에 대해 국민성장펀드가 후속투자 및 대규모 용자 연계 지원

3 AI·딥테크 친화적으로 세제·제도 개편 기재부 협조

-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검토, 전문가의 사실조사 증거능력 인정 등 기술 보호 기반 마련 추진('25.12~)

(2) B2B·B2G 신시장 개척 : 혁신벤처 성과를 산업·공공시장이 지원

1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 (B2B)

- 마일스톤식 지원을 통해 기존 단편적 기술검증 구조에서 벗어나,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단계에 따른 성과 기반 지원체계 구축 ('26~)
* '가칭 K-오픈이노베이션 허브로 온오프라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위탁거래의 '성과공유제' 모델 도입

2 벤처·스타트업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 (B2G)

-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에 벤처기업 제품을 추가, '창업·혁신제품 공공구매'로 확대 개편하여 중·후기 벤처의 B2G 시장 진출 촉진 ('26~)
* 공공구매 실적(법정목표 8%) : ('22) 6.1조원(3.9%), ('23) 5.0조원(3.0%), ('24) 5.7조원(3.3%)

[3] K-벤처의 글로벌 진출 : 글로벌 무대로 국내외 한인 벤처스타트업 연결

①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국내 거점 확대

- 실리콘밸리 등 해외 주요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구축

* 실리콘밸리('26.1)를 시작으로 도쿄('26.下), 싱가포르, 런던, 뉴욕, 상하이('27~) 추진

· (위치) 멘로파크(Menlo Park) 부근으로 인근 스탠퍼드大, 구글 등 위치 (SF 공항 30km 거리)
· (구성) 1층 : 기업 협업·교류 등 네트워킹 공간 / 2층 : 스타트업·VC 및 지원기관 업무공간
· (운영체계) ①내부 협력(KVIC, 중진공, 창진원, 기보 입주) ②외부 협업(아산나눔재단, 네이버, 현대차 등)

- 해외기업·투자사 등이 입주하는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서울 흥대)

② 글로벌 한인 창업가경제인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 해외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 등과 'K-파운더 네트워크' 구축, 공동펀드 조성(재일교포 사례) 등 민·관 합작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 중기부-한인 중심 협·단체 공동으로 벤처펀드 조성, 현지 액셀러레이팅, IR 등 개최

※ ^{가칭}「K-벤처 사절단」을 벤처·스타트업, VC, 지원기관 중심으로 구성하여 美 서부·동부, 싱가포르, 중동, 유럽 등 해외 주요 거점 중심으로 매년 지역별 1회 이상 방문

③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 강화

- ABCDEF 분야*별 빅테크 기업과 정부가 함께 韓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Around X 프로그램 확대('25. 14개 → '30. 30개)

* AI: 엔비디아, MS, AWS, IBM, 오라클, 인텔, 로레알, HP, OpenAI('26 신규) / Bio: 다쏘시스템, 아스텔라스 / Contents: 구글플레이 / Defense: 안시스스페이스, 탈레스 / Energy: 에어리퀴드 / Factory: 안시스, 지멘스, 벤츠

[4] 벤처 솔루션 매니저 : 법률·경영·규제 해결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운영

- 법률·세무·경영 등 창업가가 직면하는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단일 공간에서 돕는 전담 창구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25.12)

* AI 기반으로 '법률, 세무, 경영, 공간, 행사, 정부지원, 규제' 등 7대 지원분야 운영

②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 협단체·업계와 함께 ①발굴·숙려 (^{가칭}업종별 라운드테이블) → ②공론화 (^{가칭}Start Zero-Barrier) → ③조정·해소(부처협의 등) 3단계로 대응 총력

③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 해소

전략 2 지역과 사회 곳곳으로 혁신의 포용성 확대

- ◆ 「재도전 창업자」의 새로운 출발과 「지역 벤처인」, 「초기 투자자」, 「소셜벤처」의 성장 기회가 함께 열리는 선순환적 혁신생태계 구축

(1) 실패가 자신이 되는 재창업 지원 : 도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재도전 안전망

1 재도전 지원체계 리빌딩

-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여 유관기관의 컨트롤타워를 수행하고, 지역센터 중심으로 지역별 재도전 커뮤니티 구축 및 붙업행사 개최
- * 총괄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유관기관창진원(재창업사업화), 중진공(재창업자금), 기보지신보(보증) 등
- ‘30년까지 총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21~’25 대비 7배), 보증 실패법인 창업자가 새로 설립한 법인도 기술보증 지원(‘26~)

2 벤처투자 연대책임 개선 금융위 협조

- 벤처투자법 내 투자 주체에 한정된 연대책임 제한 조항을 신기술 금융회사·조합의 초기 창업기업 투자까지 확대(‘26~)

(2) 로컬벤처 혁신 거점 고도화 : 지역의 벤처·창업 공간 업그레이드

1 5극 3특 중심 창업도시 10곳 조성

- 지역창업 거점허브와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하고, 창경센터의 AX·특화창업·투자·OI 등 4대 기능을 대폭 강화(‘~30)
- TIPS 선정 시 지역 기업에 50%까지 우선 할당하고 수도권 대비 완화된 투자요건(수도권 2억원, 비수도권 1억원) 부여(‘~30, 1천개)

2 비수도권 스타트업 SW·HW 인프라 확산

- KAIST·포항공대 등 과기특성화대학과 연계한 딥테크 창업 거점을 구축하고, 인·아웃바운드를 통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지역으로 확산

(3) 지역·초기투자 토양 개척 : 벤처투자 저변을 국가 전역에 확대

①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기반 조성

-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자체 등 지역 혁신자금을 모아 3.5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역투자 인센티브 확대*
 - *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투자 법인 세액공제 확대 등
- 일반 모태자펀드 대상 지역투자 의무설정 및 추가 투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에 투자
- KVIC 지역사무소를 전 권역으로 확대*해, 모펀드 재원 발굴·운용, 투자인력 양성,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엔젤투자허브를 5극 3특 중심으로 확대
 - * (現) 1개소(동남권) → (改) 수도권을 제외한 6개 추가 설치(4극 3특, 총 7개)

② 초기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 규제 완화

- 초기창업펀드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전 부문에서 초기투자 중심 펀드를 우대하며 초기투자 실적 우수 운용사에 보수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국외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투자 의무기간은 3→5년으로, 상장법인 투자한도를 10→20%로 개선
 - * 창업기획자는 현재 업력 3년 이내 국내 초기 창업기업에 40% 이상 투자 의무

(4) 소셜벤처 르네상스 :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며 혁신의 온기 확산

① 소셜벤처 개념 재정립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소셜벤처 판별 기준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고 벤처기업 확인 제도와 연동해 벤처기업 특례 적용 검토 ('25.12)
 - * ESG,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PRI(책임투자원칙) 등

② 소셜벤처 자금 공급 안정화

- 매년 1,500억원 이상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고(기보, ~'30), 모태펀드를 통해 임팩트 펀드를 지속 조성하여 소셜벤처에 안정적 투자자금 공급
- 기후테크(E), 소셜벤처(S)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분야 스타트업을 전체 틈스 기업 중 10% 우선 할당

전략 3 제도·문화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를 벤처생태계로 흡수

- ◆ 「우수한 기술 인재」들에게는 과감한 도전의 무대를, 「미래 세대」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꿈을 제시하는 벤처 정신과 혁신 문화를 확산

(1) 성장 지향적 벤처 정책 구현 : K-벤처 위상을 끌어올리는 제도 혁신

1 벤처 정책의 범위 확장

-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화*하고, K-벤처의 스케일업을 위해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26~, 벤처기업법 개정)
- * 벤처기업은 '혁신성'을 갖추고 '성장'을 추구하는 동태적 기업이며, 정부의 책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임을 명시

2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 벤처캐피탈협회 협조

- 표준계약서상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을 '개별(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로 개편하고 분리형 계약서* 사용 유도
- * 동일 라운드 또는 우선주 투자자 전체에 대한 집합적 동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 분리가 필요하나 한국은 통합형 계약서 활용이 보편화

3 벤처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 및 경영 유연성 강화 금융위 협조

- ①복수의결권 주식 상장심사 시 안정적 지분 보유 기준을 '주식 수' 대신 '의결권 기준'으로 적용 검토, ②복수의결권 발행 기준* 완화 등
- * ① (투자유치 실적) ▲ 누적 100억원 이상 벤처투자이력 ▲ 마지막 투자가 50억원 이상
② (창업주 지분) 지분율 30% 이상의 최대주주인 창업주가 마지막 투자 유치로 해당 지위 상실
-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규모 고용을 유지하는 등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플립(Flip)기업'에 관한 분석·연구 추진

(2) 글로벌 인재 중심국 도약 : 최고의 기술인재가 모여드는 생태계 조성

1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창업가를 年 1,000명 발굴하고, 단계별 경연을 거쳐 '창업 루키' 年 100명 선별하고 후속 사업화, 투자유치 지원 ('26~)

② 실리콘밸리식 스톡옵션제도 도입

- 벤처기업 스톡옵션 개별 부여를 이사회 결의 사항(現 주주총회 특별결의)으로 위임하고 인센티브* 강화 (벤처기업법 개정, '26~)

* 예) 시가 미만 발행한도 확대 (5억원 → 20억원), 행사 제한기간 완화(2년 → 1년)

③ 우수인재 VC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VC 임·직원의 운용성과 기여도 명확화, VC와 투자조합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GP Entity) 도입(벤처투자법 개정, '26)

* VC 1곳이 벤처투자조합 다수의 GP가 되는 대신, VC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각각 1개의 벤처투자조합 GP를 맡는 구조

(3) 대한민국 벤처 정신 부활의 원년 : 기업가정신의 국가 전방위 확산

① 국가 벤처혁신 컨트롤타워 공식화 AI전략위 협조

- 국가AI전략위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벤처·스타트업 AI 확산 협의체' 신설, 국회·정부·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벤처·스타트업 협의체(예 : 유니콘팜 등 운영

② 기업가정신 및 벤처문화(Pay it forward) 종합포털 신설 벤처기업협회 추진

- 벤처기업 업종·산업별 이슈 대응 및 문제해결 플랫폼, 벤처 정신 아카이브, 네트워킹, 미래세대 교육* 등을 위한 종합포털 신설 ('26)

* 정규 교과에 사용되는 교과서·학습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대학생 등에 벤처투자 경험을 제공

③ 벤처주간 법제화 및 벤처 명예의 전당(아너스 클럽) 신설 벤처기업협회 추진

- 벤처주간을 통해 주요 성과를 집중 홍보하고, 대한민국 벤처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벤처인 명예의 전당' 신설 ('26)

* 매년 후보군을 추천받아 벤처주간에서 '벤처인 명예의 전당' 입성 관련 부대 행사 추진

④ 벤처천억기업 브랜드화 (가칭벤처 마일스톤 클럽) 벤처기업협회 추진

- 벤처·스타트업의 매출 구간별 달성 의미를 세분화하여 재정 의하고, '벤처천억('24년 985개사)'을 국가적 혁신 브랜드로 재정립

전략 4 모험자본 체질 개선과 벤처투자 글로벌 4강 달성

- ◆ 민관의 역량과 자원을 총결집해 「모험 투자자」가 이끄는 年 40조원 벤처투자 시장을 열고 진정한 모험자본과 벤처금융의 시대 개막

(1) 벤처투자 자원 확대 : K-벤처에 풍부한 유동성 공급

① 모태펀드 2.0 시대 : 모두의 투자 플랫폼 오픈 기재부 협조

-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이 출자 가능한 국민계정을 신설*('26) 하고, 모태펀드가 과감히 위험손실 부담
- * (現) 10개 부처가 19개 계정에 재정 출자 → (改) 연기금 등이 출자하는 '국민계정' 추가
-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재정 출자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 펀드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범부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 신설

② 법정기금과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허용 기재부·노동부 협조

- (법정기금)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가점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 시행 (퇴직연금)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6)

③ 국외자금의 국내 벤처펀드 참여 촉진

- 글로벌펀드 內 수시 출자사업을 신설, 글로벌 대형VC의 국내 벤처 투자 촉진,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하여 국외 자금유치 확대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 벤처·스타트업이 주인공인 자본 생태계

①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 금융위 협조

- (은행) 위험가중치^{RW}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예: 정책펀드 100%) 마련 (증권사) 대형IB 대상 모험자본(비상장 벤처투자 포함) 의무 공급 추진

②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 유도 공정위 협조

- 외부자금 모집, 해외투자 규제 완화* 등 운용 자율성 확대로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및 신규 설립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 * (외부자금 모집) 현재 펀드별 40% 이내 / (해외투자) 현재 총자산 20% 이내

(3) 민간투자 촉진과 벤처금융 확대 : 투명하고 공정한 모험자본 인프라

① 민간 투자촉진 세제 인센티브 강화 기재부 협조

- ①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 완화(7년 이내 → 10년 이내), ②법인의 벤처출자 시 공제 규모 확대*, ③후속투자 고려 특수관계인 기준 검토
* 벤처모펀드 : (現) 5% + 3개년 평균 초과분의 3% → (改) 5%+초과분의 5%

② 기술보증기금 기능 강화

-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기반 보증, 보증연계 투자 등 벤처금융, M&A, 기술거래·보호 등 기술금융 종합 지원

③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 근절

- 스타트업에 대한 VC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26~, 벤처투자법 개정) 및 '가칭스타트업 지원 포럼*' 구성
* 글로벌 표준과 상이한 불공정 조항, 벤처투자법규, 모태펀드 기준규약 및 표준계약서 사전 검토 등

(4) 혁신투자 선순환 구조 :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역동적 생태계

①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 고도화

- M&A 지원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추진(기보)하고, 민간 M&A 중개 기관과의 협업 체계 강화('25.12~)
* 민간과 협력해 수요 발굴부터 자문·중개·금융까지 종합 지원
- 'M&A 펀드' 공급, M&A 보증 범위 확대* 및 공급 강화 ('25. 300억원 → '30년 2,000억원)
* 벤처투자조합 인수목적 SPC형 M&A 보증(최대 500억원) 신설

②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 ①시장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세컨더리 펀드 조성 확대, ②모태자펀드 구주 매입 특례 적용(~'30), ③세컨더리 전용 'Closed IR*' 개최
* 세컨더리 수요·공급 투자사,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권역별 창경센터 중심)

۲۱۱

순 서

I. 추진 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1
II. K-벤처 30년의 진단	4
1. 혁신과 도전의 여정	4
2. 한국 벤처생태계의 성과와 한계	7
3. 향후 과제 및 시사점	14
III. 목표 및 추진 전략	16
IV. 세부 추진 과제	17
1. (전략 1) 기술의 혁신을 넘어 유니콘·빅테크 도약	17
2. (전략 2) 지역과 사회 곳곳으로 혁신의 포용성 확대	28
3. (전략 3) 제도·문화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를 벤처생태계로 흡수	35
4. (전략 4) 모험자본 체질 개선과 벤처투자 글로벌 4강 달성	45
V. 추진 일정	55

I. 추진 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1 신기술 기반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

- **(벤처 시대의 재도래)** AI·딥테크 등 문명사적 기술 대전환 국면에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새 표준으로 자리매김

* "벤처생태계는 경제성장의 최상위 동력으로, 벤처 친화 정책은 장기적인 번영으로 연결" (25 WEF)

◇ ChatGPT 3.0('22.12월)에서 딥시크 R1('25.1월)로 이어진 대형 언어 모델(LLM) 성과는 다극화된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AI 기술혁신의 파급력*을 전세계에 각인

- * ① (AI 성능의 비약적 향상) '무어의 법칙' (18~24개월에 칩 집적도 2배)을 약 10배 이상 능가
- ② (전례 없는 보급 속도) ChatGPT 사용자 2개월 만에 1억명 돌파 (인터넷 7년, 인스타그램 2.5년)

- 전통 대기업의 안정적 성과 대신 불확실성 안에서 기회를 쟁취하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 핵심 동력이라는 컨센서스 확산

- 창조적 파괴와 기술 진보, 혁신성장 등을 강조한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등이 '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특히 아기옹과 하윗은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정신이 기존 산업을 대체하며 경제 전체를 성장시키는 원리를 수학적으로 증명



- **(혁신의 세대교체)** 그간 MS·애플 등 극소수 천재의 성취로 여겨졌던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이 재현·반복되는 일상적 현상으로 확산

* 벤처캐피탈 시장의 확대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오픈소스의 발전으로 "혁신의 민주화" 현상이 보편화





- 신생 벤처·스타트업의 파괴적 혁신과 과감한 도전은 전통 대기업은 물론 선배 벤처 출신인 빅테크의 독점적 위상까지 위협하는 상황

< 참고 : 비상장 기업이 주도한 최근의 대표적 혁신 사례 >

분야	기업명	비상장 기간	핵심 성공 전략	기존 선도기업
AI (언어모델)	OpenAI	'15~현재	'초거대 모델' 확장에 과감히 배팅	MS·구글
	deepseek	'23~현재	스케일 대신 '효율성 극대화' 패러다임	오픈AI
데이터	Palantir	'03~'20	국가기관 데이터 플랫폼화	IBM
우주산업	SPACE X	'02~현재	'재사용 로켓'으로 비용 혁신	보잉·록히드
핀테크	stripe	'10~현재	개발자 친화적 온라인 결제 API	페이팔
미디어	ByteDance	'12~현재	틱톡의 초개인화 AI 추천 알고리즘	유튜브

② 최근 벤처생태계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은 국가 간 총력전 양상

- **(벤처와 기술 패권)** 최근 벤처생태계는 국가 간 패권 경쟁의 무대
→ 美·中 등 주요국은 AI 선도자 지위를 두고 무한경쟁의 각축전 중
-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인식하며 전폭적 지원
→ 공급망 재편 등 지정학적 환경과 맞물려 신냉전 수준으로 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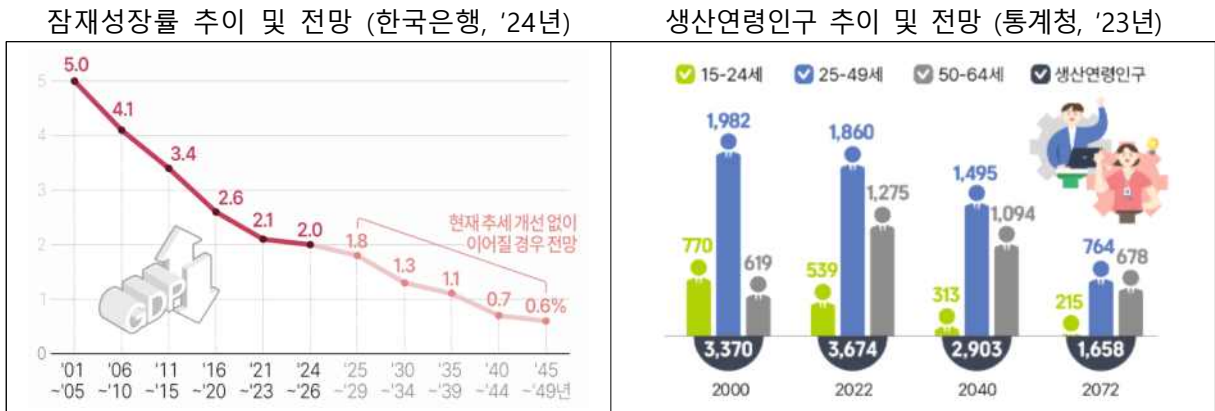
국가	벤처생태계 현황		유니콘 수 (’24년)
	기본 여건과 강점	국가 차원의 벤처 전략	
	- 세계 최대의 모험자본시장 - 빅테크(M7) 중심의 AI 인프라	- 초대형 인프라와 압도적 투자 규모를 앞세워 기술 패권 수호	656개
	- 정부 주도의 총동원 체제 - 독자적 빅테크 생태계 형성	- 자본기술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여 자체 공급망 확보 집중	168개
	- 우수 기술인재 지속 배출 - 초대형 내수시장과 인프라	- 거대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와 ‘글로벌 인재 공급국’ 위상 유지	71개
	- 세계 금융 허브 위상 - AI 규범 및 연구 선도국	- 자본력, 연구 인재, 규제 환경이 조화된 ‘글로벌 AI 허브’	53개

- **(하드테크* 부상)** 과거 벤처붐은 플랫폼·SNS 등 SW 혁신에 집중
→ 최근 국가 산업·안보에 기여하는 방산·에너지 등 하드테크 부각
- * 물리적인 제품기계를 제조하는 기술로 SW테크에 대비되는 개념 (‘딥테크’는 HWSW 모두 포괄)
- 자본시장도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하드테크 중심으로 개편^①되며, CVC와 공적 연기금, 국부펀드의 자본력^②이 투자시장 흐름을 주도
- * ① 25년 세쿼이아캐피탈 등 미국 10대 VC의 투자액 50%가 AI 및 방산·우주에 집중 투자
② 세계 연기금과 국부펀드 운용자산은 ’24년 36조 \$ (30년 50조\$⁵), 세계 사모자본의 70% (BCG)
- **(인재 유치 전쟁)** AI·반도체 등 고급 기술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각국 정부·기업은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정책 대결
- * (미국) STEM 이민 정책과 H-1B 비자프로그램으로 외국 고급 과학자·기술자 유치
(중국) 천인계획→만인계획→치망(啓明)프로그램 등 해외 우수 인재 귀국 및 자국 인재 육성 강화
- 현금·지분 등 천문학적 보상 체계와 더불어, 팀을 통째로 흡수하는 ‘애크하이어링(acquihiring)’의 보편화로 기업 조직 문화도 급변 중

⇒ 기술 패권 경쟁의 흐름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각국의 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결집시키는 사실상의 총력전 양상으로 확산

③ 대내외적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벤처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의 창

- **(복합 위기 국면)** 최근 우리 경제는 인구 절벽과 성장 둔화, 지정학적 갈등, 기후·에너지 전환 등 복합 요인이 겹치며 불확실성이 장기화
 -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축소는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복지 수요는 확대하여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위험요인
- * 한 나라의 노동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며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 **(K-벤처의 사명)** 기존 성장 공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국가의 활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은 위기를 돌파할 최선의 성장동력
 - ⇒ 특히 한국의 독특한 정치·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새로운 혁신성장 모멘텀으로 전환, K-벤처 고유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 필요

분야	대한민국 환경	K-벤처의 기회
정치 · 안보	- 관세, 무역장벽, 공급망 재편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 한국은 수출이 GDP의 40% 이상을 차지	- 제조 강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신뢰 기반의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미·중 경쟁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 파트너'로 부상한 대만 TSMC
사회	- 저출산·초고령화 진입으로 인한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 * 합계출산율 약 0.75명 및 65세 이상 인구 20% 시대 진입 ('24년)	- 돌봄, 헬스케어, 무인로봇 등 신시장 테스트베드 위치 선점 자국의 초고령화 상황을 잘 활용한 일본 'Cyberdyne' (재활의료 로봇 기업)
문화	- 음악·드라마·패션·게임·푸드·뷰티 등 K-컬처 산업생태계 저변 확대 * 단순 콘텐츠 수출을 넘어 기술 융합형 컬처테크(culturetech) 산업으로 진화	- 혁신기업 전반의 글로벌 신뢰도 상승 및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회 K-POP 팬덤 문화를 플랫폼 차원에서 구현한 한국의 '위버스'(HYBE 자회사)

II. K-벤처 30년의 진단






1 혁신과 도전의 여정

- ◆ K-벤처는 '95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기업가정신의 DNA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의 숨은 힘으로 작동
- ◆ 맨손으로 산업을 개척하고 IT 플랫폼 기업을 키워낸 도전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야 하는 전환점

1 벤처 정신의 뿌리 : 불모지에서 산업을 일군 1세대 기업가의 도전

- **(불굴의 개척 정신)** 전쟁 후 기본적인 인프라도 없던 시절 자본 부족은 모험적 차입으로, 기술 결핍은 모방으로, 시장 부재는 해외 진출로 돌파
 - 데이터·시장분석 대신 시대를 꿰뚫는 동물적 감각(animal spirit)으로 안정적 시장·고객 관리를 넘어 첨단기술 최전선의 美·日 대기업에 도전장
- **(국가적 소명의식)** 당시의 기업가정신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가난한 나라를 재건한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소명의식과 결합
 - 정부는 목표·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독점적 사업권 부여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기업의 합작 프로젝트 양상

< 참고 : 대한민국 1세대 기업가들의 혁신 사례 >






기업	창업가	혁신 사례
	이병철	정미소·제당업에서 시작해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도체 진출
	정주영	조선소도 없이 배부터 수주하는 등 상식을 파괴하는 문제해결
	구인회	라디오 한 대를 분해·조립하며 한국 전자산업 초석을 쌓음
	최종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산업에 도전
	김종희	화학 기술의 불모지에서 고위험 화약 산업 국산화 성공

⇒ 전후 폐허 속에서도 현장을 누비며 기술에 천착한 1세대 기업가의 집념은 현재의 벤처기업인에게도 도전과 개척의 이정표로 인식

② 벤처 시대의 본격화 : 제조업에서 IT·모바일 플랫폼 경제로 진화








- **(제조 기반의 출발^{개척세대})** '80~'90년대 제조·HW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반도체·통신·의료기기 등 실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中企 가능성 증명

< 참고 : 대한민국 벤처 개척 세대 >

기업	창업가	혁신 사례
 비트컴퓨터	조현정	의료정보 SW 시장의 선구자, 병원 행정 전산화의 주역
 MEDISON	이민화	자체 기술로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하여 세계 최초 상용화
 HUMAX	변대규	고난도 SW 개발로 셋톱박스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JUSUNG ENGINEERING	황철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장비의 독자적 기술 개발
 BASAN	남민우	초고속 인터넷 장비 국산화로 대한민국의 IT 강국 도약에 기여

- **(IT·인터넷 혁명^{1세대})** IMF 위기로 한계를 맞은 산업구조에 IT 중심의 성장비전을 제시하여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강국 도약의 발판 마련
 -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망 등 디지털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코스닥 시장, 벤처확인제도, 모태펀드 등으로 벤처 붐을 적극 지원
- **(모바일 혁명과 플랫폼 경제^{2세대})** '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커머스·콘텐츠·금융·모빌리티 등 생활 전반으로 혁신생태계 확장
 -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삼고 압도적인 서비스를 설계하여 각 영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

< 참고 : 대한민국 벤처 1~2세대 >

기업	창업가	혁신 사례
 NAVER	이해진	자체 검색엔진과 콘텐츠 플랫폼을 혁신 생태계로 확산
 kakao	김범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만들어 한국인의 소통 방식을 바꿈
 NC	김택진	'리니지'를 통한 MMORPG의 대중화와 온라인 게임의 산업화
 coupang	김범석	e커머스의 혁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배송 과정 최적화
 toss	이승건	간편송금 혁신, 올인원 금융 슈퍼앱 모델 확장
 KRAFTON	장병규	한국 게임사 최초 글로벌 메가히트 IP '배틀그라운드'
 무이한홀딩스	김봉진	음식 주문 시장을 소비자 친화적인 UI로 디지털화에 성공

지난 30년간의 벤처·스타트업 출신 대표기업

※ 음영 : 모태펀드 자펀드의 출자이력이 있는 기업

	기업	업종	창업(년)	주요 아이템	기업규모(재계 순위)
개척세대 (HW)	휴맥스	제조업	'89	셋톱박스	중견기업
	주성엔지니어링	제조업	'93	반도체 제조 기계	중견기업
	다우기술	SW 개발	'86	금융IT솔루션	준대기업 (49위)
	메디슨	의료기기	'85	초음파 진단기기	-
	비트컴퓨터	의료 SW	'83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중소기업
	다산네트웍스	통신장비 제조	'98	유무선 통신장비	중견기업
벤처 1세대 (IT·인터넷)	네이버	포털·검색	'99	지식IN	대기업 (22위)
	다음	포털·검색	'95	무료 이메일	-
	셀트리온	바이오·제약	'02	렘시마	대기업 (21위)
	넥슨	게임	'94	바람의나라	대기업 (41위)
	NC소프트	게임	'97	리니지	중견기업
	넷마블	게임	'00	웹보드 게임	준대기업 (45위)
	컴투스	게임	'98	모바일 게임	중견기업
	에코프로	2차 전지	'98	하이켈 양극재	준대기업 (55위)
	네오위즈	게임	'97	웹보드 게임	중견기업
	게임빌	게임	'98	모바일 게임	중견기업
	안랩	정보·보안	'95	V3	중견기업
	한글과컴퓨터	SW 개발	'90	아래아한글	중견기업
	지마켓	이커머스	'99	오픈마켓 플랫폼	-
	인터파크	이커머스	'96	온라인 쇼핑몰	-
	YES24	도서 전자상거래	'99	온라인서점	중견기업
	모태펀드 출범 ('05년)				
벤처 2세대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	모바일 플랫폼	'06	카카오톡	대기업 (16위)
	쿠팡	이커머스	'10	로켓배송	대기업 (25위)
	크래프톤	게임	'07	배틀그라운드	준대기업 (60위)
	우아한형제들	푸드테크	'11	배달의민족	중견기업
	쏘카	모빌리티	'11	쏘카존	중견기업
	비바리퍼블리카	핀테크	'13	토스	중견기업
	무신사	패션	'12	무신사스토어	중견기업
	두나무	핀테크	'12	업비트	대기업 (36위)
	빗썸코리아	핀테크	'13	빗썸	준대기업 (90위)
	야놀자	숙박 플랫폼	'07	모바일 예약	중견기업
	컬리	이커머스	'14	신선식품 배송	중견기업
	버킷플레이스	인테리어	'14	오늘의집	중견기업
	IGA웍스	마케팅 솔루션	'18	애드브릭스	중견기업
	메가존	클라우드	'10	메가존클라우드	중견기업
	직방	부동산 플랫폼	'10	직방	중견기업
	에이블리	패션 플랫폼	'15	에이블리	중견기업
	트릿지	농식품 플랫폼	'15	농수산물 플랫폼	중소기업
	당근	중고거래 플랫폼	'15	당근마켓	중소기업
벤처 3세대 (AI·딥테크)	퓨리오사	AI 반도체	'17	반도체 칩	중소기업
	리벨리온	AI 반도체	'20	반도체 칩	중소기업
	뤼튼	AI 언어모델	'21	AI 포털 서비스	중소기업
	업스테이지	AI 언어모델	'20	솔라	중소기업

- ① (벤처 이전 세대) HW 중심의 제조 기반 **B2B 기업** (전자·통신·기계 등)
- ② (벤처 1~2세대) IT·인터넷 중심 → 모바일 기반 커머스·플랫폼 **B2C 기업**
- ③ (벤처 3세대) AI·반도체·딥테크 기반으로 **다시 제조업과 B2B, B2G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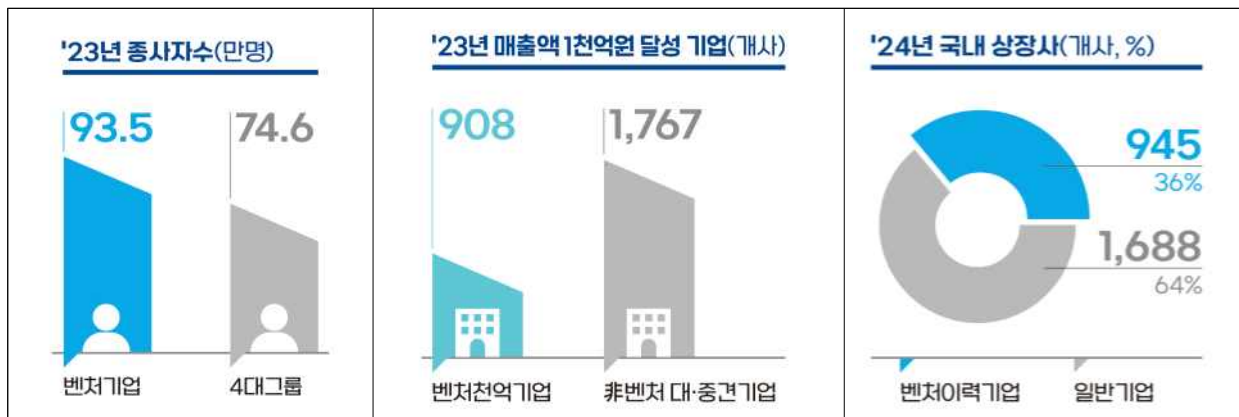
2 한국 벤처생태계의 성과와 한계

① [성과]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을 함께 이루며 한국경제 주역으로 부상

- **(벤처 정책의 단계적 진화)** 80년대 이후 각 정권은 시대적 과제에 맞춰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을 차례로 달성하는 정책 흐름 축적
 - (양적 성장) 벤처 초창기에는 벤처기업법, 모태펀드 등 기본적인 제도의 토대를 만들고 혁신기업 수를 늘려가는 양적 팽창에 초점

시대	정부 정책 흐름		벤처생태계 주요 성과
'80년대	- 창업지원법 제정 ('86) - 창업보육센터(BI) 설립 ('87)	⇒	- 한국 VC 산업 태동 - 제1호 창투자 ('86년, 한국기술투자)
'90년대	- 코스닥 시장 출범 ('96) - 벤처기업법 제정 ('97)		- 제1차 벤처붐 촉발 - 벤처기업협회 중심의 혁신문화
'00년대	- 모태펀드 출범 ('05) - 모태펀드 1조원 돌파 ('09)		- 정부주도 모험자본 공급 본격화 - VC 산업의 전문화 및 확산
'10년대	- TIPS 지원사업 시작 ('13) - 제2 벤처붐 선언 ('19)		- 벤처생태계의 민간 주도 전환 - 유니콘 출현 가속화 ('22년 20개 돌파)

- (질적 고도화) 제2 벤처붐 선언 이후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확장, 민간 자생력 확보 등 질적 고도화를 위한 다각도 제도개선에 초점
- **(한국경제의 중심축)** 우리 벤처생태계는 유통·금융 등 산업 구조를 혁신함은 물론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 경제 주역



중기부 출범 이후의 벤처·스타트업 대책 주요내용

시기	대책 명	핵심 내용
'18.3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창업투자·회수·재도전' 선순환 구조 구축 기술·인재·자금 중심의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생태계의 기본 골격 마련
'19.3월	제2 벤처붐 확산전략	스케일업 및 민간자본 활성화 창업 열기를 본격적인 성장으로 연결, 민간 주도의 대규모 벤처투자를 촉진
'20.4월	K-유니콘 프로젝트	미래 유니콘 기업 선별 및 집중 육성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마련
'21.8월	벤처 4대강국 도약을 위한 보완대책	생태계의 글로벌 도약 기반 마련 인재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제도 개편, M&A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
'22.9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네트워크 마련
'22.10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미래 산업 분야의 딥테크 기업 육성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22.11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투자 흑한기 극복 및 시장 활력 제고 경기 둔화에 대응해 민간 벤처모펀드, 글로벌 자본 유치 등 새로운 자금 유입 통로를 확보하여 투자 생태계의 역동성 강화
'23.4월	혁신 벤처·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방안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공급 및 규제 혁파 10.5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함께 복수의결권 도입, CVC 규제 완화
'23.7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국경과 지역을 넘는 범정부 창업 허브 구축 외국인 창업 및 취업 비자 제도 개편, 민간 중심대기업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아시아 No.1, 글로벌 3대 창업 국가'로 조성
'24.10월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투자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글로벌 펀드 대규모 조성, 벤처펀드 운용 자율성 확대 등 실리콘밸리형 제도 도입

② [한계] 기술 · 지역 · 인재 · 투자 네 축의 미비로 성과 확장에 제약

① (기술·시장) IT·서비스 중심의 생태계로 딥테크 친화성 부족

- (대기업 주도 딥테크) 대기업과 중견 제조기업이 산업의 중심이며, 딥테크 기반의 벤처·스타트업은 일부 틈새에서 제한적으로 활동
 - 현 산업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선호하는 대기업의 성향이 신생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도전장을 내밀 여지를 제한


분야	국내 선도기업	벤처·스타트업 역할 및 위상		
반도체	 삼성전자	SK hynix	-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 생태계로, 벤처는 팹리스·후공정 등 틈새 혁신시장 돌파 시도	
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 on	- 기술·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올드머니 생태계로, 소재·데이터 혁신에도 사업화는 대기업에 의존
바이오	 SAMSUNG BIOLOGICS	 CELLTRION	 SK bioscience	- 임상·인허가 비용 부담으로 스케일업 한계, 대기업 CMO에 의존
AI	 NAVER	 SK telecom	 LG AI연구원	- 대형 AI 모델 개발 등 고난이도 영역은 자본력 부족 등 벤처·스타트업의 접근성 제약
방산	 Hanwha Aerospace	 LIG넥스원	 HYUNDAI Rotem	- 발사·위성체 벤처·스타트업 증가세이나 내수시장 한계로 글로벌 진출이 반드시 필요
자동차	 HYUNDAI MOTOR GROUP		- 완성차는 대기업 주도, 스타트업은 서비스·특정 SW 및 부품에 한정	

- (기술창업 생태계 미비) 첫 구매자 역할의 앵커 수요가 부족하고, 실증 인프라 제한 → 기술창업가의 열정만으로 딥테크 도전은 한계
 - 자본시장에서 '짧은 투자 사이클'이 고착되어, VC는 장기투자를 주저하고 M&A 등 회수시장 부진 →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기피






국가	하드테크 벤처·창업 생태계	
	앵커 수요	기술 사업화 지원
	국방부, NASA, 에너지부 등 정부기관	Manufacturing USA, 국립연구소, 시험·검증 인프라가 발달
	국유기업과 정부기관이 첫 고객	산업단지 중심의 저비용 공용 설비·파일럿 라인이 광범위하게 설치
↕		
	대기업 공급망 진입이 관건이나 초기 레퍼런스를 얻기 어려운 측면	시험·인증 인프라 역시 부족하여, 고비용을 감수하고 자체 해결

② (지역·공간) 수도권에 집중된 생태계로 지역 잠재력 활용 미비

-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 우리 벤처생태계는 여전히 자본·인재·인프라가 서울과 판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다소 고착화
 - 글로벌 추세는 과거 실리콘밸리 일극 체제를 넘어, 각 지역의 고유한 산업·인적 자산과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 혁신 거점 육성




국가	지역	특징	주요 혁신기업
	실리콘밸리	AI·반도체	애플, 구글, 메타, 엔비디아, 오픈AI 등 다수
	뉴욕	핀테크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 등
	텍사스 오스틴	HW·SW 연계	테슬라, 오라클, DELL
	보스턴	바이오·로보틱스	모더나, 바이오젠, 킹코 등
	시애틀	클라우드	아마존, MS
	베이징 (중관춘)	AI·빅데이터	바이트댄스, 바이두, 디디
	선전	ICT·통신·드론	텐센트, 화웨이, BYD, DJI
	항저우	플랫폼·AI	딥시크, 알리바바, 앤트그룹
	상하이	금융·바이오	핀뉘뉘, 샤오홍슈 등
	청두·충칭	SW·제조	이렌, 차바이따오, 주바지에왕
	서울 강남	플랫폼·커머스	토스, 쿠팡, 직방, 무신사, 켈리, 리디 등
	판교	IT·게임·SW	네이버, 카카오, 넥슨, 크래프톤, 두나무 등

- **(로컬벤처 잠재력)** 우리나라 거점 지역은 대학·연구기관, 산업단지, 지자체 지원체계 등 로컬벤처 도약을 뒷받침할 토양이 이미 마련
 - 특히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기업 인프라, 전통 제조 中企의 AX 역량 등 다양한 혁신 동력 활용 가능

지역	대학	강점 분야	지역 혁신생태계
대전		AI·로봇·우주항공	주요 정출연 및 대기업 R&D센터 집적
광주		AI·자율주행	국가 AI 데이터센터 및 기아 오토랜드
대구·경북		뇌과학·미래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울산		화학·에너지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 대기업
포항		첨단소재	포스코 및 철강·소재 관련 소부장 中企

③ (사람·문화) 위축된 기업가정신과 경직된 근로문화로 인재 유치 차질

- **(위축된 기업가정신)** 청년 문화 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며, 사회적 선호는 의사 등 안정적인 고소득 직업에 집중
 - * 20~39세 청년 중 창업 시도 경험자 비율 : 美 35.1%, 中 29.4%, 韓 12.2% (25.7월 한경연·중앙일보)
 - 창업을 희망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여전히 낮고 제도적 문턱이 높아 구조적으로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어려운 여건
- **(혁신 근로문화 부족)** 한국 기업 생태계는 美·中 등 벤처 강국 대비 획일적인 보상체계, 위계적 절차·관행 등 다소 경직적인 근로환경
 -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의 일률적인 적용이 우수한 기술인재들의 상상력과 열정을 평준화시켜 혁신의 잠재력을 제한한다는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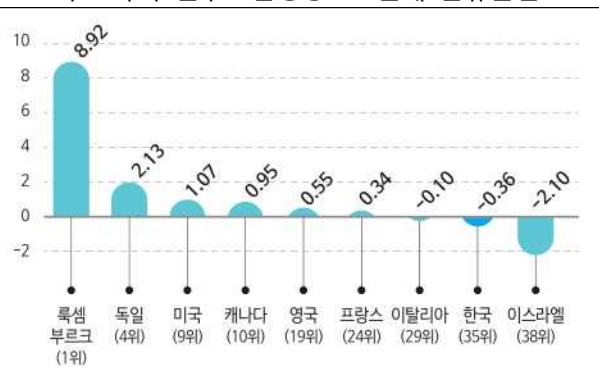
국가	벤처·창업 문화	혁신생태계 근로환경
	"Fail fast, Fail often" 빠르게 자주 실패해 보라는 마인드셋	장시간의 몰입 근무 대신 '할리우드 스타 계약'에 준하는 초고액 보상
	"랑성(狼性)" 늑대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	996*으로 대표되는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며 조직적·애국적 헌신 문화 * 오전9시~오후9시 / 주 6일제 근무 방식
⇕		
	"존버" 현실이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라는 신조어 "먹튀" 성공 후 엑시트(exit)하는 창업가를 비교는 표현	주 52시간제 활용이 법제화되어 있고 임금 등 성과 보상은 대체로 평준화 ※ 현재 벤처기업 재직자의 약 70%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의향有 (25.10월 벤협)

- **(고급 인력 유출)** 억만장자 창업가와 부의 축적·과시가 터부시되는 문화 속에서, 우수 기술 인재들이 성취를 존중하는 외국으로 유출
 - * OECD 38개국 중 연간 ICT 박사 배출 5위, AI 종사자 수 10위이나 AI 인재 순유출은 35위

< 美 발급 고급인력(EB-1·2) 비자 (단위: 명/인구10만명) >



< 주요국의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



* 대한상의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25.6.19)

④ (자본·투자) 모험자본시장의 우수성을 이어갈 질적인 탈바꿈 시점

- **(모험자본시장의 성장)** 모태펀드* 마중물 자본을 기반으로 연간 벤처 투자 12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시장을 구축하여 세계 5대 강국 등극

* 20년간 벤처투자 플랫폼으로서 투자 라운드 다변화 등 우리 VC의 문법을 바꾸고 글로벌 수준으로 견인

- (VC 활성화) ('05년) 103개 → ('24년) 297개
- (투자규모) : ('08년) 1.2 → ('24년) 11.9조원
- (펀드조성) 총 10조 9천억원을 출자하여 44조 6천억원 규모 자펀드 조성
- (투자성과) 모태자펀드 투자기업(1.1만개) 중 39개 유니콘 탄생, 626개 IPO 성공
-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8% 기록, 최근 5년간 10% 이상(정기예금 수익률은 1~3%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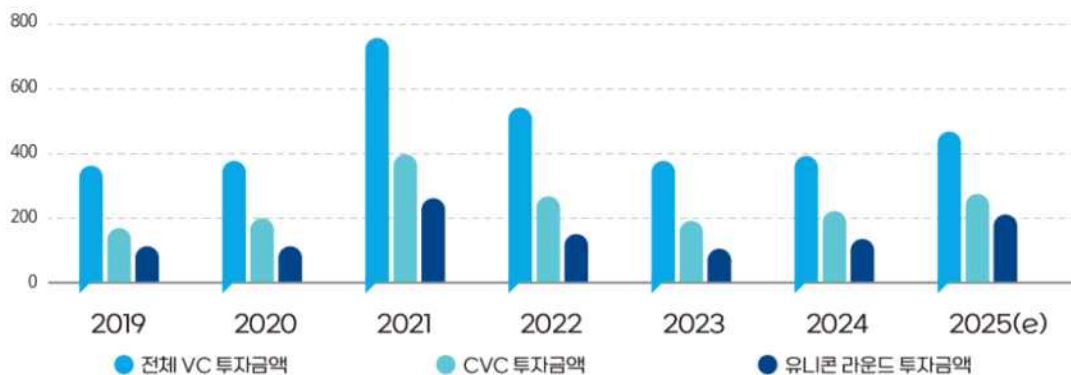
- 팬데믹 시기 대호황 이후 세계적 고금리 기조와 러·우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한때 급랭했으나, AI·딥테크 중심으로 점진 회복

- **(장기자본 취약성)** 미국 등 선진국 대비 장기자본 기반의 지속적 투자기반이 부족하며 투자주체 다각화와 해외자본 유치는 제한적

- 반면 글로벌 흐름은 CVC와 연기금, 국부펀드(SWF)의 자본력이 유니콘 라운드 등 초대형 거래를 촉발하며 투자시장 흐름을 주도

* 세계 공적 연기금과 국부펀드 운용 자산은 '24년 총 36조 달러로('30년 50조 달러 예상), 현재 전 세계 사모자본의 최대 70%를 통제 (보스턴컨설팅그룹, '24.12월)

< 글로벌 연간 벤처투자 규모 (단위 : 십억 달러) >



* KPMG '25.2Q Venture Pulse Report – Global Trends

한국 · 세계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05년~'25년)

순위	한국		세계	
	'05.12월	'25.9월	'05.12월	'25.9월
1	삼성전자	삼성전자	General Electric	NVIDIA
2	한국전력	SK하이닉스	ExxonMobil	Microsoft
3	POSCO	LG에너지솔루션	Microsoft	Apple
4	국민은행	삼성바이오로직스	Citigroup	Alphabet (Google)
5	LG필립스LCD	한화에어로스페이스	BP	Amazon
6	현대차	현대차	Royal Dutch Shell	Meta
7	SK텔레콤	현대중공업	WalMart	Saudi Aramco
8	KT	기아	P&G	Broadcom
9	신한지주	KB금융	Toyota	TSMC
10	우리금융	두산에너지빌리티	Bank of America	Berkshire Hathaway
11	하이닉스	셀트리온	HSBC	Tesla
12	S-Oil	한화오션	Johnson&Johnson	JPMorgan Chase
13	LG전자	네이버	AIG	Walmart
14	KT&G	신한지주	Pfizer	Tencent
15	신세계	한국조선해양	SABIC	VISA
16	외환은행	삼성생명	Gazprom	Eli Lilly
17	SK	삼성물산	Altria	Oracle
18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Total	Mastercard
19	하나은행	카카오	Intel	Netflix
20	기아차	알테오젠	Glaxo Smith Kline	ExxonMobil

※ 음영 : 통상 벤처·스타트업 출신으로 분류

◇ 주요 시사점

1. 세계는 빅테크 중심으로 경제 질서 재편

- '05년 상위 기업은 에너지·금융업·소비재·제조 등 전통 산업 중심이었으나, '25년에는 AI·반도체·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

2. 한국 역시 신성장 흐름으로 다각화 시도

- 삼성전자, 현대차, 금융지주회사 등 기존 강자들이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LG엔솔, 삼성바이오, 한화에어로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이 대거 진입

3. 벤처·스타트업 출신 기업의 부상

- 한국·세계 모두 벤처·스타트업 출신 기업의 약진이 관찰되나, 한국의 경우 전통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 의존도가 지금까지는 높은 것으로 확인

※ (참고) Financial Times Global 500,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3 향후 과제 및 시사점

1 (향후 과제) 시 고속도로를 타고 내수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디테크로

- **(내수시장 한계 극복)** 그간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주로 내수에 의존
→ 지속적인 유니콘·데카콘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필수적
* 美中과 달리, 인구 5천만명 수준의 한국 내수시장은 유니콘 성과를 확장시키기 어려운 측면
- 최근 국내 유니콘은 내수시장의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일부 해외 진출에 시도 중이나 주로 M&A 파트너십 중심의 선택적 확장
* 최근 야놀자, 당근, 토스 등 신흥 유니콘 중심으로 해외 스타트업을 적극 인수 시도 중

구분	국내 유니콘 : 내수 최적화	해외 유니콘 : 국경 없는 문제해결
숙박	(yanolja) 모텔·펜션 등 한국 특유의 숙박 문화에 집중한 혁신 모델	(airbnb) '남는 방 공유'라는 직관 보편적인 아이디어로 200국 진출
핀테크	(toss) 한국의 복잡한 금융 규제, 실명 인증 절차 등을 집중 공략	(stripe) 전세계 모든 개발자가 겪는 온라인 결제 불편함 해소
모빌리티	(socar) 한국의 높은 인구밀도, 주차공간부족, 대중교통 환경 집중	(Uber) 스마트폰과 GPS만 있으면 작동 가능 → 각국 규제 대응 집중

* 최근 라인, 크래프톤 등 태생적으로 해외 현지화에 성공한 모델도 존재

- **(디테크 유니콘 창출)** 그간 SW, 플랫폼 혁신 등에 집중된 유니콘 성과를 기술 난이도가 높은 제조 기반 디테크 분야로 확대할 필요

구분	하드테크 분야의 신흥 유니콘					
	미국		중국		한국 (유니콘 후보 포함)	
항공·드론	ANDURIL	Shield AI	ISPACE	DJI	UMV	PABLO AIR
바이오	colossal	insitro	ABOGEN	Insilico Medicine	없음	
AI 언어모델	ANTHROPIC	Inflection	ZHIPU-AI	Moonshot AI	upstage	wrtn.
반도체	SambaNova	cerebras	YANGTZE MEMORY	BITMAIN	FURIOSA	rebellions_
자율주행	nuro	Gatik	momenta	pony.ai	없음	
로봇틱스	FIGURE	AGILITY ROBOTICS	UNITREE	AGILE ROBOTICS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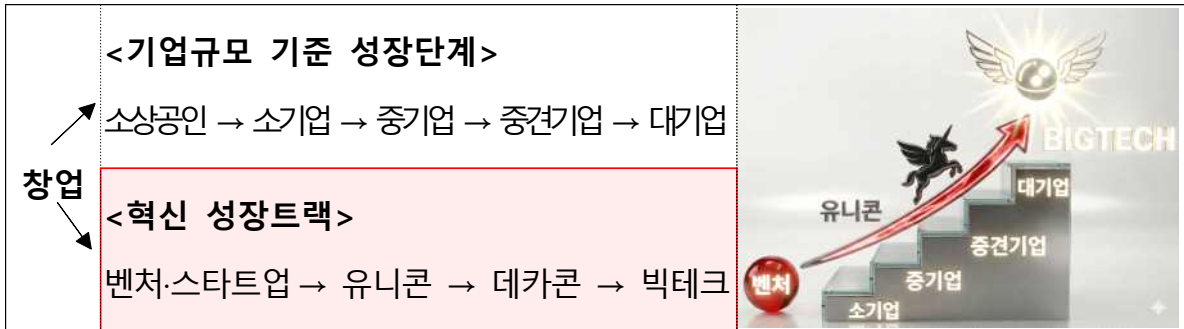
※ 리디, 버킷플레이스, 직방, 메가존, 에이블리 등 K-유니콘 대부분은 플랫폼, SW 개발에 집중

⇒ 글로벌 유니콘 육성의 승부처는 파괴적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의 각성이며, 도전을 뒷받침할 벤처생태계의 역량과 뒷심이 중요

② [시사점] 벤처 4강 도약을 위해 기존 제도를 깨는 파괴적 혁신 전략 필요

① 창업 후 유니콘을 넘어 월드클래스로 비상하는 K-빅테크 육성

- 중기부 정책 대상을 법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유니콘·데카콘 육성에 특화된 혁신성장 트랙도 병행 운영



② 기업가정신과 도전하는 벤처 문화를 경제성장과 혁신의 수단으로 확산

- 벤처 정신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국민 전체에 환기시키고, 청년과 미래세대 창업가들이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벤처 환경 조성



③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대기업과 나란히 서서 벤처시대 실현

-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성장모델 대신 벤처를 혁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아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국가전략 마련



IV. 세부 추진과제

전략 1 기술의 혁신을 넘어 유니콘·빅테크 도약

◆ 극한의 기술혁신과 B2B·B2G 시장 개척을 꿈꾸는 「혁신 창업가」를 전폭 지원하여 AI 스타트업 1만개 육성 및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1) K-빅테크 성장 트랙 : AI 고속도로를 타고 유니콘·데카콘 도약

1 압도적 GPU 인프라 등으로 AI 스타트업 1만개 육성

- ①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GPU 인프라 지원 ('26~, 과기정통부 협조)
 - 정부 확보 GPU(약 5만장, ~'28년)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이 AI 연구·개발등 혁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
- ② 혁신 AI 스타트업 1만개사 육성 ('26~'30)
 - 창업·투자·AX 등 다방면으로 정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총력 동원하여 '30년까지 혁신 AI 스타트업 1만개사 육성



③ 스타트업 정책의 중점 기술 패러다임 재정비 ('26~)

- 스타트업 정책의 중점 기술 패러다임을 「ABCDEF 6대 전략산업」 및 「12대 신산업 기술」로 재편

AI	AI 반도체	Contents	콘텐츠
	양자·보안·네트워크	Defence	국방·우주항공·해양
	로봇릭스	Energy	친환경
모빌리티	에너지·원자력		
Bio	생명·신약(화장품)	Factory	센서·공정
	헬스케어(뷰티기기)		



참고 : 6대 전략산업 지원 방향

A 인공지능

AI 가치사슬에 속한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하여, 기술 실증과 판로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AX 챌린지' 개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보유 정예팀*과 유망 AI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과기부 협조)

*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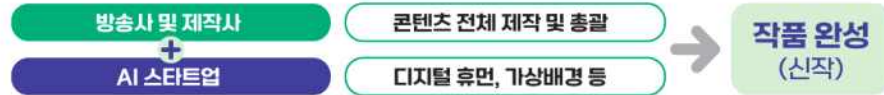
B 바이오

바이오벤처와 제약기업, AI 벤처 간 공동 R&D를 지원하여 신약 개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첨단장비 사용부터 사업기획, 투자유치까지 종합 지원하는 혁신 인프라 'K-바이오 랩허브' 구축

C 콘텐츠

방송사·제작사와 AI 스타트업을 매칭,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편집·유통까지 업무공정 효율화 일괄 지원



D 방위산업

군·방산업체와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고, 개형 D(efense)-창업중심대학을 신규 운영하여 우수인재 유입

군 수요와 연계될 수 있는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레퍼런스 확보 후 군 적용시 초도물량 양산까지 지원

E 기후테크

민·관 합동 '기후테크 챌린지'를 개최하고, 선발된 우수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창업패키지 및 후속 투자 연계

친환경·에너지 분야 대·중견 및 공공기관과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연결하여 실증·판로 기회 제공

F 첨단제조

'30년까지 AI 중심 스마트공장 1.2만개 구축 등 스타트업이 제조 AI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시장수요 창출 및 전략적 R&D 지원 추진

지역혁신기관(TP, 연구소 등) 활용, 제조 스타트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을 돕는 '첨단제조 스케일업' 추진

② 유니콘·데카콘 50개 육성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 가동

● 차세대 유니콘 발굴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 본격 추진

- 기업당 최대 1,000억원을 성장단계별로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개시
→ 매출 발생까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지원
 - * 스타트업(20억원) → 스케일업(100억원) → 유니콘(600억원+α) + 해외진출(해외투자 유치)
- ⇒ '30년까지 총 13.5조원 지원을 통해 유니콘 후보기업 50개사 육성

< K-빅테크 투자 사다리: 'NEXT UNICORN Project' + 국민성장펀드 >



- 펀드·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로 유망 기업 집중 육성

- (스케일업 펀드) 창업사업화·R&D·금융 등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추천한 성과 기업('NEXT UNICORN Pool')에 중점 투자
- (유니콘 펀드) 민간이 발굴한 유니콘 후보기업에 민간 200억원, 모태펀드 200억원, 기술보증 200억원 등 총 600억원을 집중 지원
- (해외진출 펀드) 정부가 육성한 유망 기업*이 해외투자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용 IR 개최

* NEXT UNICORN Pool, 스케일업·유니콘 펀드 투자기업 등

-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가 발굴·육성한 유니콘(후보) 기업에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후속투자 및 대규모 용자 연계 지원*(금융위 협조)

* 예: 국민성장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 운용사에 유니콘·해외진출 펀드 투자기업 Pool 정례 공유 등 유망 기업 정보 제공,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공동 IR 개최 등 투자 연계 강화

3 AI·딥테크 친화적으로 창업·R&D·보증 프로그램 고도화

1 (창업) 딥테크 기술분야 특화 창업패키지 도입 ('26~)

- AI·딥테크 기술에 도전하는 초기·도약기 창업가를 선별하여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딥테크 창업패키지' 도입('26. 250개사)

* 딥테크 특화형 주관기관 선정 → 사업화자금 + 기술이전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지원

2 (R&D) AI·딥테크 스타트업 친화적으로 TIPS 체계 개편 ('26~)

- 「팁스방식 R&D」를 창업(팁스) → 성장(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글로벌 팁스)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 구조로 확대

* 팁스, 스케일업 팁스 R&D의 물량·단가를 확대하고, 글로벌 팁스 R&D 신설

< TIPS 방식 R&D 지원 체계 개편 사항 >

구분	확대 팁스 R&D	확대 스케일업 팁스 R&D	신설 글로벌 팁스 R&D
세부 내용	2년간 5억원(700개사) → 2년간 8억원(800개사)	3년간 12억원(152개사) → 3년간 20~30억원(300개사)	(신설) → 4년간 50~60억원(100개사)

- 팁스 협의회를 구축하고, 후배기업 대상 멘토링 등을 자체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Pay-it-Forward 문화 확산

3 (사업화·보증) 유니콘 브릿지 프로그램 신설 ('26~)

- 시리즈B 스타트업에 마일스톤 방식으로 대규모 사업화+기술보증을 지원하고, (2단계)목표 달성 달성 수준에 따라 사업화 자금 환원('26. 50개사)

단계	요건	선발	지원	통과요건
1단계 (1년차)	50억원 이상 투자유치	50개사	사업화 6억원+ 기술보증 100억원	후속투자 100억원 유치
2단계 (2년차)	1단계 통과	20개사	사업화 10억원+ 기술보증 100억원	후속투자 200억원 유치 → 성공 시 최대 5억원 환원

4 AI·딥테크 친화적으로 세제·제도 개편

1 AI·딥테크 등 신산업 스타트업의 성장기반 강화

- (세제혜택)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 검토(기재부 협조, '26~)
- (투자유치) 글로벌 VC·CVC 등이 포함된 '초격차 스타트업 VC 멤버십*'을 구성하여 AI·딥테크 전담 IR 개최 등 투자유치 촉진('25.4Q)

* 초격차 스타트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VC·CVC 등 25개사가 참여

- (핀테크 투자) 벤처투자 가능한 핀테크 분야 확대^① 및 명확화^② (벤처투자법 시행령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관리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 ~'26)

* ① 장외거래중개업('25.9 신설)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② '투자금지 예외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회사 및 인가단위' 기준으로 변경

2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술침해 소송시 전문가의 사실조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25.12)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홍보를 강화('26~)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공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해 증거능력 인정

- 법원의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촉탁 근거 마련 ('25.11, 상생협력법 개정 完), 기술개발비의 손해액 인정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전문기관 지정·운영*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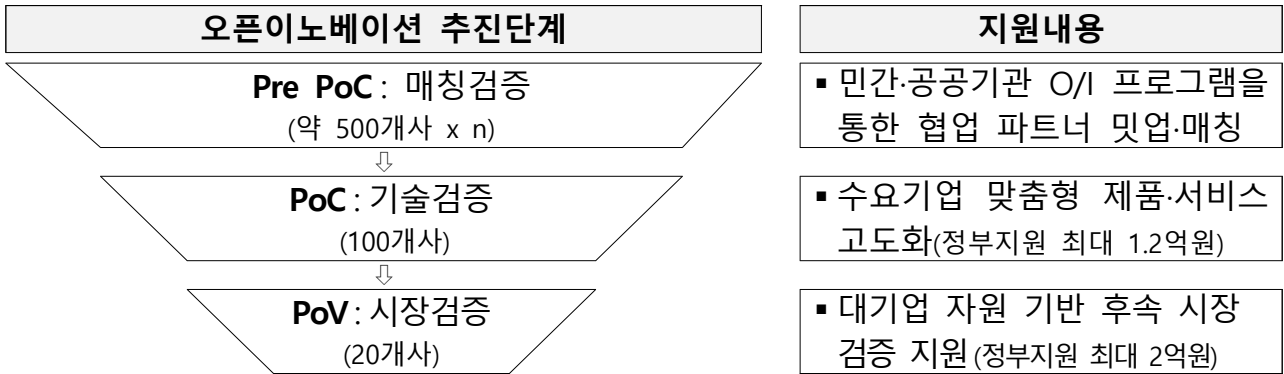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 內 '(가칭)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 마련

- 중대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20억원) 도입, 기술탈취 기업 공공조달 입찰참여 제한 등 처벌 강화(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개정, '26~)

(2) B2B · B2G 신시장 개척 : 혁신벤처 성과를 산업·공공시장이 지원

①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 (B2B)

- ① 마일스톤식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단편적 기술검증 구조에서 벗어나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단계에 따른 성과 기반 지원체계 구축



②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상시 협업 지원체계 구축

- (온라인) 초기 협업 매칭부터 후속 기술거래, 투자, M&A 등까지 책임지는 전주기 지원 플랫폼 '가칭K-오픈이노베이션 허브' 구축('26년~)

- (오프라인)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로 스타트업 파크 내 '가칭 개방형 혁신 확산 센터' 운영

* 경북 경산, 충남, 천안, 대전 등



③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적용되던 인센티브 및 법적 의무 구조를 벤처·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로 확산

- (인센티브) 수·위탁기업 상생협력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를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관계까지 확대 하고, 인센티브* 강화

* 성과공유제 인센티브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 가점 도입 등

- (법적 의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던 법적 의무*를 오픈이노베이션을 포함한 양자 관계로 확대('26~, 기술보호법 개정)

* (수위탁·하도급 거래 공통) NDA 체결, 부당한 기술요구 금지, 보복행위 금지 (수위탁에만) 기술임치 요구시 불이익 제공 금지 / (하도급에만) 서면 발급

2 벤처·스타트업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 (B2G)

- ①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창업·혁신 제품 공공구매 제도'로 개편하여 중·후기 벤처기업의 B2G 시장 진출 촉진('26~, 중소기업창업법 개정)
 -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창업기업 제품·서비스 의무구매(총 구매액의 8%)에 벤처기업 제품·서비스 추가
- * 공공기관 의무구매 실적: ('22) 6.1조원(3.9%), ('23) 5.0조원(3.0%), ('24) 5.7조원(3.3%)
- ② 벤처·스타트업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1:1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 특화 공공구매 상담회' 신설('26~)

3 지역 제조 AX·DX 수요 창출 (B2B)

-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1.2만개 보급(~'30)을 통해 제조AX·DX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시장 수요 창출
 - 특히 AX·DX를 현장에서 실현할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기업^①'의 정체성을 지닌 스마트제조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②
- * ① 전통 제조기업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HW·SW 자동화 및 AI 기반 데이터화, 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기술 기반 솔루션을 제공
- ② 제조AI 등 스마트제조 분야 산업 및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 및 전략적인 R&D 지원 추진 등

< 제조 AX·DX 공급기업으로 유니콘 진입에 성공한 해외 사례 >

국가	기업명	전통 제조기업에 공급하는 핵심 솔루션
이스라엘		- 공장 설비 상태 진단 및 유지보수 자동화
독일		- 프로세스 마이닝 등 로그 데이터 분석 기술로 공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 비효율 피드백
미국		- 산업용 IoT 하드웨어(센서·카메라) 및 클라우드
프랑스		- 창고·공장 물류 자동화 로봇 시스템 구축·판매

2 글로벌 한인 창업가경제인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1 해외 주요국의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와 'K-파운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관 합작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 중기부 -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 공동으로 현지 액셀러레이팅, IR, 연례행사 등 개최

사례 : UKF 82 스타트업 서밋

·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UKF(한인창업자연합) 주최, 1,000명 이상의 한인 벤처투자자·스타트업이 모이는 **미국 최대 규모 한인 스타트업 행사**(25.1, 美 실리콘밸리 개최)

-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 및 글로벌 창업가가 등록·교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컴업 2026 內 '글로벌 K-파운더 서밋' 개최

2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한 역내 협력 강화

* 주요 기능 : ① 스타트업 포럼 개최, ② 네트워크 강화, ③ 플랫폼 구축·운영

3 한인 벤처·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돕는 현지 한인 창업가·경제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26~, 벤처기업법 개정)

4 해외 주요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투자자와 공동펀드를 결성*하는 등 한인 투자 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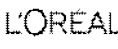











* (예시: 제주출신 재일교포 출자 공동펀드) 도쿄세경센터 등 일본 투자자와 모태펀드가 각각 40억원, 30억원을 출자하고 제주도가 3억원을 출자하는 등 100억원 규모로 공동펀드 조성

3 글로벌 빅테크 기업·해외 정부와의 협업 강화

1 ABCDEF 분야별 빅테크 기업과 정부가 함께 韓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Around X 프로그램** 확대('25. 14 → '30. 30개)

* '26년 4개 글로벌 기업 신규 참여 : (A) HP, 오픈AI (B) 아스텔라스 (F) 메르세데스벤츠

< '26년 기준 산업 분야별 참여 글로벌 기업 (총 18개 프로그램) >

AI(인공지능)								
								
Bio (바이오)	Contents (콘텐츠)	Defense (방위·우주)	Energy (에너지)	Factory (제조)				
								

2 국내 AX 기업 및 AI반도체·서비스 기업 컨소시엄 대상 해외 기업·정부 등 수요처와 연계한 현지 맞춤형 실증 지원* 확대('25. 각 8개, 과기정통부 협조)

* 데이터 기반 AI 모델 현지화, AI모델 탑재·최적화된 AI반도체 현지 설치 등 지원

[4] 벤처 솔루션 매니저 : 법률·경영·규제 해결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1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운영

1 법률·세무·경영 등 창업가가 직면하는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단일 공간에서 돕는 전담 창구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25.12~)

- 온·오프라인 원스톱 지원 플랫폼 운영

- (온라인) K-Startup 포털을 개편하여, 창업사업 신청 창구를 넘어 주요 애로 분야별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확장

* 중기적으로 부처별 분절된 창업지원 플랫폼을 K-Startup 포털로 연계

- (오프라인)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소)를 지역 현장창구로 지정하여 지역별 전문가(법률·경영 등) 및 멘토(선배 창업가 등) 연결

- AI 기반 종합 지원체계 구축

- (7대 지원분야) 현장 창업가가 주로 희망(설문조사 등)하는 7대 핵심 지원 분야 운영 → 법률, 세무, 경영, 공간, 행사, 정부지원, 규제

- (AI 상담체계) 축적된 창업가 데이터를 DB화하여, 기초적인 애로사항은 'AI 멘토 챗봇'이 해결하는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②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① (발굴·숙려) 협·단체 및 업계가 참여하여 신산업 규제를 발굴·논의하는 ^{가칭}업종별 라운드테이블 및 창업규제신문고 가동

* (업종별 라운드테이블) 오프라인 전문가 논의 (창업규제신문고) 온라인 상시 건의

② (공론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국회 등이 참여해 공론화하고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가칭}'Start Zero-Barrier 포럼' 개최

③ (조정·해소) 단순 행정조치 사안은 ombudsman지원단 등을 통해 소관 부처와 신속 협의하고, 민감 쟁점은 국조실에 건의

< 신산업 분야 규제애로 해소 체계(안) >

① 발굴·숙려	② 공론화	③ 조정·해소
오프라인 업종별 라운드테이블	Start Zero-Barrier 포럼 (年 2회)	단순사항 ombudsman지원단
온라인 창업규제신문고		쟁점사항 국조실 등




③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 '26.초 ^{가칭}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수립발표 예정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 국가전략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 해소

- 산업 융합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전략과제를 기획
- 선정된 광역연계형 특구에 대해서는 중기부 주도로 기업간 협력·R&D·사업화 및 덩어리 규제 해소 일괄 지원

< (예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비즈니스 >

산업 융합	유통망 구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 스마트 농업특구 >	< 新 해양물류산업 특구 >	< 수소 모빌리티 특구 >
(A지역) 자율주행트랙터 ↔ (B지역) 드론 ↔ (C지역) 신에너지농공단지	(D지역) AI로봇 ↔ (E지역) 드론 ↔ (F지역) 자율주행선박 항구	(G지역) 수소 생산 ↔ (H지역) 저장·운송 ↔ (I지역) 수소모빌리티

전략 2 지역과 사회 곳곳으로 혁신의 포용성 확대

◆ 「재도전 창업자」의 새로운 출발과 「지역 벤처인」, 「초기 투자자」, 「소셜벤처」의 성장 기회가 함께 열리는 선순환적 혁신생태계 구축

(1)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창업 지원 : 도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재도전 안전망

1 재도전 지원체계 리빌딩

< 재도전 응원본부 신설 >

- ①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전국 19곳)를 총괄하는 민·관 합동 '재도전 응원본부' 구축, 재도전 유관기관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25.12~)
 - * 총괄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내 재도전 응원본부 설치
유관기관 : 창진원(재창업 사업화), 중진공(재창업자금), 기보·지신보(보증) 등
-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재도전 커뮤니티 구축, 권역별 재도전 붙임행사 개최 등 전국적인 재도전 응원 문화 확산

< 재도전 펀드 확대·개편 >

- ② 실패 경험을 갖춘 재창업자가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총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 조성 추진('21~'25 대비 7배)
 - 실패 창업자의 재도전 기업에 중점 투자하여 과거 실패를 경험한 유능한 창업자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 (現) 경영악화 중소기업(매출액 감소 등)도 포괄적으로 지원 →
(改) 실패창업자의 사업전환·재창업에 집중 투자
- 재도전 기업 IR을 확대^①하고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재도전 펀드의 연계 강화^②
 - * ① (예시) 재도전성공패키지 IR 대회 개최 시 재도전펀드 운용사를 심사위원으로 초빙
②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재도전 지원기업 정보를 펀드 운용사에 정례 공유 등

〈 가칭재창업·재기지원 보증 신설(기보) 〉

③ 기술보증 실패법인^①의 창업자가 새로 설립한 기업(법인)에 대하여도 보증을 지원하는 '가칭재창업·재기지원 보증^②' 신설 ('26~, 100억원)

- * ① 기술보증 이용 기업(법인)이 채무상환을 하지 못해 기보가 대위변제한 경우
- ② 제도 취지를 고려, 기술평가 뿐만아니라 성실경영주 판단 기준 충족 필요

2 벤처투자 연대책임 개선 금융위 협조

● 벤투사·조합, 창업기획자·개투조합에 적용중인 연대책임 제한 조항을 신기술금융회사의 초기 창업기업 투자까지 확대('26~)

< 주요 투자주체별 연대책임 제한 조항 현황 >

연대책임 제한 도입完		확대 추진
모태펀드 출자조합	+	신기술금융회사 및 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KVIC 규약	벤처투자회사·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법('25.12~)	

(2) 로컬벤처 혁신 거점 고도화 : 지역의 창업·투자 공간 업그레이드

1 5극 3특 중심 창업도시 10곳 내외 조성

〈 지역 창업 거점허브 조성 〉

① 창업 주체간 협력·지원(투자, 사업화, OI 등)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지역창업 거점허브'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10곳 내외 조성

- 대형화·집적화된 창업공간*이 없는 비수도권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 추가 구축('26. 3개소)

* 스타트업 파크,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② 창경센터가 지역창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대 기능
(AX·특화창업·투자·OI) 집중, 지역 내 창업정보 통합 제공* 등 노력

* 예시: 전북창경은 50여개 지역 내 지원기관 정보를 모아 스타트업에게 온라인 정보 제공

< 지역 산업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신설 >

③ 수도권 대비 **완화된 투자요건**(수도권 2억원, 비수도권 1억원)을 부여하고, TIPS 선정 시 **지역 기업에 50%까지 우선 할당**(~'30, 1천개)

④ **창경센터 중심으로 대·중견기업-지자체-정부가 지역 전략분야 특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지역 특화창업 패키지*** 신설

* 투자유치 단계를 고려 사업화 자금, 창업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

⑤ **지역별 국내·외 창업생태계 교류를 위한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 창경센터 중심으로 스타트업 네트워킹·투자행사 개최(예시 : 대전 스타트업 투자위크)

⑥ **창업도시 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창업기업)를 대상으로 BM고도화, 투자유치 등 사업화^① 지원 및 제조 창업공간 우선^② 제공**

* ① 특구사업자(창업기업) 대상 '지역 특화창업 패키지' 사업 지원우대(가점 또는 쿼터 제공)

② 특구사업자의 메이커 스페이스(거점랩) 이용 신청시 장비 사용 우선권 부여

< 창업도시 - 지역 창업거점 허브 체계(안) >



② 비수도권 스타트업 SW·HW 인프라 확산

①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과기특성화대학***과 연계하여 딥테크 분야 초기 스타트업 육성 추진(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26~)

* 후보군 : KAIST, 포항공대, GIST, UNIST, DGIST

② **외국인 창업가 유치(인바운드) 및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아웃바운드)를 통합 지원하는 권역별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확산**('26. 1개소)

(3) 지역·초기투자 토양 개척 : 벤처투자 저변을 국가 전역에 확대

① 지역 벤처투자 마중물 확대 및 여건 개선

< 3.5조원 규모 지역성장펀드 신설 >

①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방정부, 금융기관, 대학 등 지역 혁신자금을 모아 '지역성장펀드' 조성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 ~'30)

- 지역 모펀드 최초 출자자에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신설하는 등 과감한 출자자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참여 유인

* 최초 출자자 대상으로 출자지분의 최대 30%를 모태펀드에 매각할 권리 부여

-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 모펀드를 조성^①하고, 지역 주도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②

* ① 지역사회 참여도, 지자체의 스타트업 연계지원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순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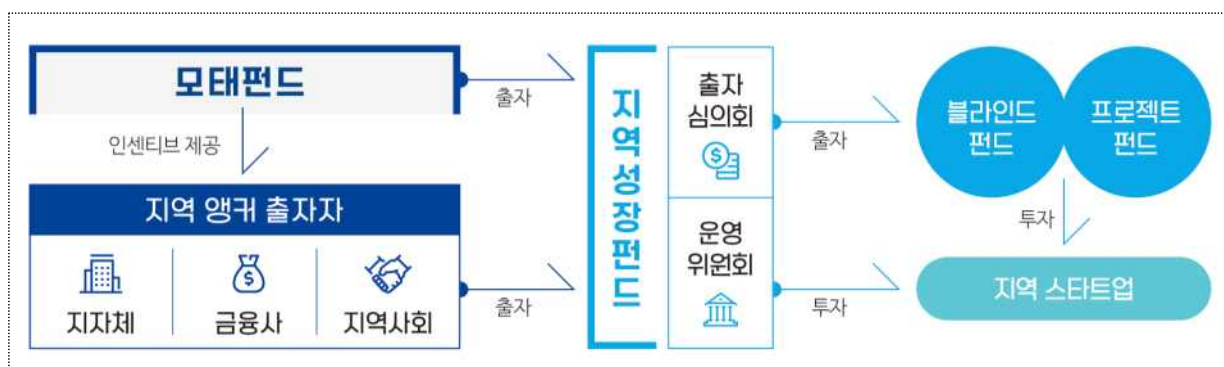
② 지자체, 지방중기청, 주요 출자자 등이 참여하여 자펀드 출자방향 등 수립

- 발굴·보육 역량이 우수한 지역AC 전용펀드와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로젝트 펀드 등)을 통해 지역 초기 및 후기 투자 보완

- 자펀드 선정시, 조성 지역에 본점이 소재하거나 상근 인력*이 근무하는 지점이 있는(설치 예정 포함) 운용사 선정 우대 강화

* (기존) 상근 인력 유무와 관계없이 지점만 있어도(설치 예정 포함) 가점 부여

< 지역성장펀드 운용구조 >



② 모펀드 재원 발굴·운용, 투자인력 양성, 네트워킹 등 지원하는 KVIC 지역사무소를 전 권역에 확충*

* (現) 1개소(동남권) → (改) 수도권을 제외한 6개 추가 설치(4극 3특, 총 7개)

〈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 기반 조성 〉

③ 일반 모태자펀드 대상 지역투자 의무설정 및 추가 투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에 투자

④ 내국법인이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지방 기업*에 직접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현행 5% → 7%) 검토 (기재부 협조, '26~)

*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을 하는 등 실질적 기여를 하는 기업으로 중기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

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벤처투자법 개정)

* (現)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한 지자체만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허용
→ (改) 모든 지자체의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허용

⑥ 지역 모펀드를 통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한 경우에도, 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을 49%까지 상향 적용

* (現) 지자체 및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이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을 49%까지 허용 中

⑦ 지역 벤처붐 확산을 위한 엔젤투자허브 확대 추진

- 現 권역별 4개소(대전·광주·창원·경산)에 설치되어 있는 엔젤투자 허브를 5극 3특 중심으로 확대 검토*(~'30년)

* ('27년 계획) 5극 3특 중 허브가 없는 강원, 전북(전주), 제주 지역부터 설치 추진

- 엔젤투자허브는 스타트업-투자자 연결, 엔젤투자자 발굴·육성,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 엔젤투자 생태계 백서 발간 등 역할 수행

< 지역 내 엔젤투자허브 역할 >

구분	세부 내용
스타트업-투자자 연결	엔젤투자 밋업, 투자포럼 등 네트워킹 지원
엔젤투자자 발굴·육성	투자 설명회, 엔젤투자자 실무교육, 전문개인투자자 육성 교육 등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	지역 대학, 창경센터 등 협력 및 법률·회계·투자·전문가 매칭
엔젤투자 백서 발간	지역내 엔젤투자 통계, 주요 엔젤투자·회수 사례 등

- 5극 3특 권역별 대규모 합동 IR 개최로 지역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② 초기투자 활성화

<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공급 확대 >

- ① 유망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창업펀드* 확대

* 업력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원 미만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

- 초기창업 외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경우, 초기투자 의무 제안 펀드를 우대 선정하고, 초기투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보수 우대 등, '25~)

<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 규제 완화 >

- ② (의무투자 대상) 창업기획자 의무투자 대상^①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요건^②을 갖춘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확대(벤처투자법 개정, '26~)

* ① 창업기획자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투자할 의무 有
 ② △투자유치이력이 없는 경우 또는 △업력 3년이 되기 전에 해당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에 후속투자 하려는 경우

- 의무투자 산정 대상에 업력 3년 이내 국외 창업기업*을 포함하여 벤처투자회사와의 규제 형평 제고(벤처투자법 개정, '26~)

*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는 국외 창업기업

- ③ (투자의무 기간) 창업기획자 등*의 투자의무 준수 유예기간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여 투자 자율성 제고(벤처투자법 개정 完, '25.12~)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 ④ (상장법인 투자)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20%로 상향 조정(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6.상)

< AC·개투조합 규제 완화 전·후 비교 >

구분	의무투자 대상 확대	투자의무 기간	상장법인 투자
기존	(업력) 창업기획자는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40% 이상 투자 의무 (국외) 국외 창업기업은 창업기획자 의무투자 산정 대상에서 제외	등록 후 3년까지 의무투자 기준 만족 필요	개인투자조합은 상장법인에 출자금액의 10%까지만 투자 가능
	↓	↓	↓
개선	(업력)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대상 확대 * 업력 3년 초과 기업은 투자이력이 없거나, 후속투자인 경우로 한정 (국외) 국외 창업기업도 의무투자 대상에 포함	등록 후 5년까지 만족	상장법인에 20%까지 투자 허용

[4] 소셜벤처 르네상스 :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며 혁신의 온기 확산

① 소셜벤처 개념 재정립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① (단기: 개념 재정비) 소셜벤처 판별기준에 ESG,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PRI(책임투자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26~)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소셜벤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 확인 제도와 연동 검토
- ② (중장기: 개별법 제정) 소셜벤처의 목적, 개념, 기준과 지원 근거 등을 규율하는 「^{가칭}소셜벤처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추진('26~)
 - * 현재 소셜벤처에 관한 사항은 「벤처기업법」 일부 조항(제16조의10)으로 규율 중
- ③ 대한민국 소셜벤처의 글로벌 연결성 강화를 위해 '^{가칭}글로벌 소셜벤처 네트워크 대회' 개최('26.12월)

② 임팩트 펀드·보증 확대

- ① (보증) 향후 5년간 매년 1,500억원 이상 임팩트 보증 지원(기보)
- ② (펀드) 모태펀드를 통해 임팩트 펀드를 지속 조성하여 소셜벤처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 공급
 -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를 확보하여 소셜벤처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조성하는 펀드 유형을 신설(벤처투자법 개정, '26~)
- ③ (창업사업화) 예비창업패키지 내 소셜벤처 창업 지원 확대('25. 60개사 → '26. 70개사)

③ 틱스 프로그램 내 ESG 부문 신설

- 기후테크(E), 소셜벤처(S)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분야 스타트업을 전체 틱스 기업 중 10% 우선 할당

전략 3 제도·문화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를 벤처생태계로 흡수

◆ 「**우수한 기술 인재**」들에게는 과감한 도전의 무대를, 「**미래 세대**」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꿈을 제시하는 벤처 정신과 혁신 문화를 확산

(1) 성장 지향적 벤처 정책 구현 : K-벤처 위상을 끌어올리는 제도 혁신

1 벤처 정책의 범위 확장

1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 명확화 (벤처기업법 개정, '26~)

- 벤처기업은 '혁신성'을 갖추고 '성장'을 추구하는 동태적 기업이며, 정부의 책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임을 명시

< 「벤처기업법」 전부 개정 방향 >

구분	현행 조문	개정 조문(안)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혁신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벤처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책무	(조문 없음)	정부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 벤처기업의 성장지향적 특성 >

- 벤처기업은 혁신성을 갖추고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외형적 규모가 아닌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
 - * '25.9월말 기준, 1회 이상 벤처 확인을 받은 계속 기업 9.1만개사 분포 (소상공인) 1.1만 → (중소기업) 7.7만 → (중견기업) 1,240개사 → (대기업) 151개사
- 벤처 이력기업 중 상장사는 전체의 1.3%, 외감회사는 11% 수준이나, 상장사는 총 고용의 16%, 외감회사는 고용의 절반 이상(53%)을 차지
 - ⇒ 기업 성장 단계를 관통하면서 성장하는 소수의 기업이 나머지 기업의 성과를 압도하는 성과 시현(= 먹 법칙 지배)

< 벤처기업 중 대기업이 된 사례 : 네이버 >



- (주요이력) 벤처기업 확인('99), 코스닥 신규상장('02), 코스피 이전상장('08), 상출제한기업집단 지정('21)

②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벤처기업법 개정, '26~)

- 일정 규모 미만 비상장 중견기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 포함하고 벤처기업 특례 제도 활용 허용

* 예)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 중견기업

< 중견기업까지 허용되는 벤처기업 특례 제도(예시) >

구분	세부내용
주식매수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도 부여 가능 ■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부여 가능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를 시가 미만으로 설정 가능
복수의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창업주에 주당 2~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 발행 허용
성과조건부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목적 자기주식 취득 허용
코스닥 상장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 상장 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벤처펀드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 의무투자 대상(운용 중인 조합 출자금 합계의 40% 이상 투자)에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견기업'도 포함

③ 창업기업 인정 기준 합리화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개정, ~'25.12)

- 설립 시점 기준, 창업기업으로 미인정된 경우에도 추후 미인정 사유를 해소할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②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협조

① 표준계약서상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을 '개별(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로 개편하고 분리형 계약서* 사용 유도

* 동일 라운드 또는 우선주 투자자 전체에 대한 집합적 동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 분리가 필요하나 한국은 통합형 계약서 활용이 보편화

<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비교 >

현행 : 개별 동의권 행사 시	개편 : 집합적 동의권 행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투자자 모두 사전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의사결정 복잡성(↑), 개별 투자자 권리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로 사전동의권을 행사하여 의사결정 복잡성(↓), 상대적 지분 비례 권리보호(↑)

- ② **주식전환비율(refixing) 조항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산식으로 개정 및 다운라운드 시 투자자 합의에 따른 비율 조정 권리 명문화 검토**
- ③ 이외에도 최근 법령 개정, 최신 판례를 반영, 업계와 함께 표준계약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KVIC·KVCA와 함께 해설서 배포('26.1Q~)

< 참고: 국내·외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현황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에서 제공하는 표준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Veto rights)이 포함**

< 표준 투자계약서 상 사전동의(협의)권에 포함되는 주요 경영사항 사항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의 변경 ▪ 회사 구조 변화(합병·분할·해산·청산·M&A·영업양수도 등) ▪ 대규모 자산처분·투자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외부감사인 선임·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의 증감 및 증권 발행(유상증자·전환사채·스톡옵션) ▪ 중대한 사업 변경(신규 사업 착수 또는 포기) ▪ 타회사에 대한 투자(자회사 설립 또는 50% 이상 지분 취득) ▪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
|---|---|

- **현행 표준계약서는 투자자 개별로 사전동의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 만장일치 동의로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반면, 미국은 라운드별 주요 투자자가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초다수 또는 비경영 이사의 과반으로 사전동의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보편화**
 - * 라운드별 투자자의 과반 동의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는 주주에 신인의무를 지므로 주요 투자자 그룹이 지분 비율에 따라 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 **싱가포르의 주주간계약을 통해, 사전동의권을 라운드별 투자자 과반 동의로 규정하는 방식을 활용**

3 벤처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 및 경영 유연성 강화

< 복수의결권 주식 활성화 논의 >

- ① **상장심사* 시 적용되는 ‘안정적 지분 보유 기준’을 ‘안정적 의결권 보유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금융위·한국거래소 협조)**

*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질적심사기준 - 최대주주등의 안정적 지분 보유 여부

- ② **현금출자에 의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시 외부투자자의 지분 희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특례* 마련 검토(벤처기업법 개정)**


* 예시)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수를 한도로 주식 소각을 전제로 창업주의 보통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 허용

③ 투자유치 규모, 발행 횟수 등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기준 완화 검토

*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23.12) 이후 2개사만 제도 활용

④ 법률 전문가, 유관기관(예탁결제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기업,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플레이북*' 발간('26)

*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발행 이후까지 실무적인 내용 포함

	<p>"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목적은 창업주 지분 희석 문제를 해소하여 상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절차에 관여하는 공공·민간기관이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알지 못해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p>
---	--


〈 벤처·스타트업 플립(Flip) 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⑤ 플립(Flip)^① 절차를 안내하는 플레이북을 발간하고 플립 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②에 관한 분석·연구 추진

* ①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 법인의 주주는 현지 법인의 지분을, 현지 법인은 기존 한국 법인의 지분을 전부 보유토록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행위

②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규모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 국내에서 시작해 해외로 플립한 스타트업 : 샌드버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채팅 API를 개발하는 B2B SaaS 기업, 본사는 美 캘리포니아에 소재, 한국에는 대규모 R&D 오피스 운영 중 ▪ (주요이력) '21년 투자유치 기준 유니콘 기업 등극
---	--

④ 벤처·스타트업 법률 분쟁 리스크 완화

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간 분쟁의 조기해결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벤처투자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검토('26~)

* 예시) 벤처투자에 관한 분쟁 조사 기능을 부여 및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② '가칭' 중소·벤처 조정중재원' 설립 논의*를 시작하여 기술 보호 및 벤처투자 분야의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을 중장기 검토

* 신산업을 영위하는 벤처·스타트업 특성상 투자계약과 기술침해가 불가분의 관계인 점을 고려, 두 영역(기술보호, 자본거래)을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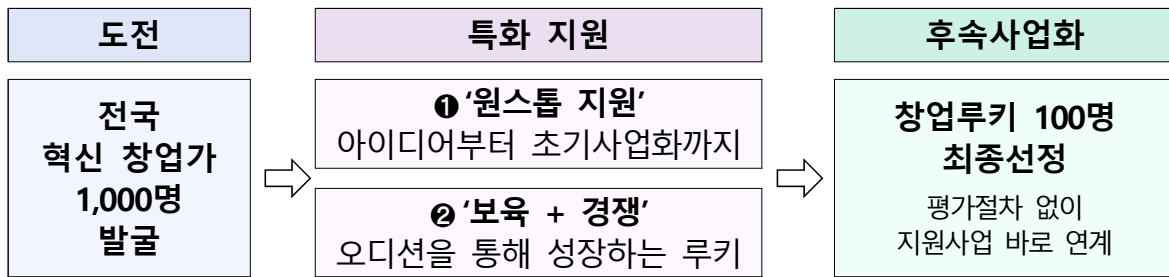
(2) 글로벌 인재 중심국 도약 : 최고의 기술인재가 모여드는 생태계 조성

① 기술혁신 인재를 벤처창업가로 육성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

- ①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창업가를 매년 1,000명 발굴하고, 단계별 경연을 거쳐 '창업 루키' 年 100명 선별하고 후속 사업화, 투자유치까지 지원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체계(안) >



(Phase 1)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의 진입장벽 완화

- 전국 각지에서 아이디어를 보유한 혁신 창업가 1,000명 발굴,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누구나 창업에 도전

(Phase 2) '단계별 경쟁+보육'의 새로운 지원방식 도입

- '창업오디션'에 K-pop 오디션 방식을 적용, 단계별 경쟁구조와 보육을 결합한 '성장형 오디션' 방식을 새롭게 도입

* 상위 라운드로 갈수록 보육 고도화 및 단계별 인센티브 강화(최대 2억원의 혜택)

(Phase 3) 창업루키를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도입, 지원사업 평가 면제

- '26년도 최종 선정된 창업루키 100명은 별도 평가절차 없이 창업 지원사업으로 바로 연계('27~)

〈 벤처 스튜디오 모델 활성화 〉

② 창업기획자(AC)가 주도적으로 BM 구체화, 사업화·창업까지 기획하고 투자까지 진행하는 '벤처스튜디오 방식' 창업 확산('26년~)

③ VC·AC 및 기술지주가 '벤처 스튜디오' 방식으로 신사업을 투자·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 지배 목적 투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검토

* (現) VC·AC가 경영지배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7년(1년 연장 가능) 이내에 지분 전부를 매각 의무 有

〈 AI 솔루션 기반 1인·소형(솔로프리너) 창업모델 활성화 〉

④ 소규모 코딩, 영상·음성 생성, 디자인·그래픽 등을 지원하는 분야별 AI 솔루션을 예비·초기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1인·소형창업 활성화 ('26~)

* 분야별 AI 솔루션 리스트업 및 전담교육 · 구독료 지원 → 예) (코딩) GitHub Copilot, (영상) Runway, (음성) ElevenLabs (그래픽 디자인) Adobe Firefly, Midjourney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개선 〉

⑤ 지자체 및 민간 전문기관 등이 유망 외국인 창업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별비자(D-8-4S) 추천권한 부여('25.4Q~)

⑥ 첨단기술 보유 등 한국경제에 기여할 우수 외국 기업인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발굴·추천*하여 글로벌 혁신인재 유입 촉진

* 스타트업 특별비자 추천제도를 활용, 지재권 수준 · 매출 성장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소속 기관이 없는 기업인에 대해 중기부가 특별귀화 추천기관 역할 수행

〈 국내 복귀 AI 인재 세금 지원 〉

⑦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이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6~'28, 개정완료)

② 실리콘밸리식 주식보상제도 도입 등

〈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 활성화 〉

①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총 부여 한도는 정관(주총 특별결의)으로 정하고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같음하도록 허용 (벤처기업법 개정, '26~)

- 벤처·스타트업의 '완전희석방식' 계약 유인을 제공하여 스톡옵션 제도의 인재 확보 및 보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

② 표준계약서상 사전동의권의 스톡옵션 부여를 스톡옵션 총 부여 한도로 변경하고, 완전희석기준 지분 산정* 추가(벤처기업법 개정 이후)

* 투자 전 기업가치(pre money value) 40억원, 투자자 10억원 신주 투자 시 :

(발행) 투자자 20%, 창업자 80% → 평가가치 50억원

(완전희석) 투자자 20% 창업자 70% + 옵션풀 10% → 평가가치 45억원(옵션풀 소진시 50억원)

< 한국과 미국간 스톡옵션 제도 비교 >

구분	한국	미국
부여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법」상 총 주식수의 50%까지 부여 가능하며, 그 범위 안에서 정관 변경으로 부여 한도를 정할 수 있음 (=주주총회 특별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델라웨어 회사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총 부여한도 제한은 없으며, 스톡옵션 부여 한도(Option Pool)는 주주간 합의(주주간계약)로 정함
한도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결정 사항
투자 유치시 기업가치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법」상 개별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기업은 투자계약 시 '완전 희석 기준'(Fully Diluted Basis)를 채택할 이익이 적음('발행 기준'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 희석 기준'(Fully Diluted Basis)과 '발행 기준'(Outstanding basis) 모두 채택 가능(투자 계약 실무상 '완전 희석 기준'이 주로 채택)
스톡옵션 활용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 기준' 채택 시,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마다 투자자(VC)의 지분이 희석되므로 투자자 부동의(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 활용)로 스톡옵션 활용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 희석 기준' 채택 시, 임·직원의 옵션 행사가 투자자(VC)의 지분 가치에 선반영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독립적으로 스톡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

③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가 임·직원에게 급여(현금) 이상의 보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해석 명확화

<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 관련 조치 사항 >

구분	세부 내용
시가미만 발행 확대 및 cliff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톡옵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25.7월말 기간 부여된 스톡옵션 중 행사가가 시가미만인 경우는 38% 수준 ■ 행사 제한기간(cliff)도 완화(현 2년 → 1년, 벤처기업법 개정)
행사가 조정 허용 및 부여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 조정, 무상증자·액면분할·주식병합 등을 고려하여 스톡옵션 부여 결의사항에 '행사가 조정에 관한 사항' 추가(벤처기업법 개정) ■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벤처기업의 기존 자회사 임직원까지 확대(벤처기업법 개정)
스톡옵션 매뉴얼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에 변경되는 스톡옵션 제도 해설 및 다양한 스톡옵션 활용* 사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가를 액면가까지 낮추어 '신주발행형 RSU'처럼 활용하는 케이스 등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에 행사이익 과세 시 시가의 기준이 되는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 기준에 관한 판단 가이드라인 등 세금 관련 정보 포함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제도(RS) 활성화 >

④ 신주 발행형 성과조건부주식보상(Restricted Stock Awards) 도입

- 공동창업자 및 초창기 핵심인력은 회사와의 이해관계 일치를 위해 일정 지분을 보유 → 조기 이탈*(퇴사) 리스크 완화 필요

* 공동창업자가 주식을 받은 후 6개월만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자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하는 상황 초래

- 성과 달성 전까지 양도가 제한되고, 성과 달성 전 퇴사시 회사가 되사가는 조건이 부여된 주식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검토

* 벤처기업법에 최소 재직 기간(Cliff) 및 권리 확정 요건(Reverse Vesting) 규정, 성과 미달성시 회사가 정해진 금액으로 부여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근거특례 마련 등

< 벤처·스타트업 인재 매칭데이 운영 >

⑤ 벤처·스타트업이 전문연구요원*과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역별 주요 대학 중심으로 매칭데이 개최 (벤처기업협회 협조, '26~)

* 수요에 따라 산업기능요원(학사), 재학생 인턴 매칭 등도 추진

3 우수인재의 VC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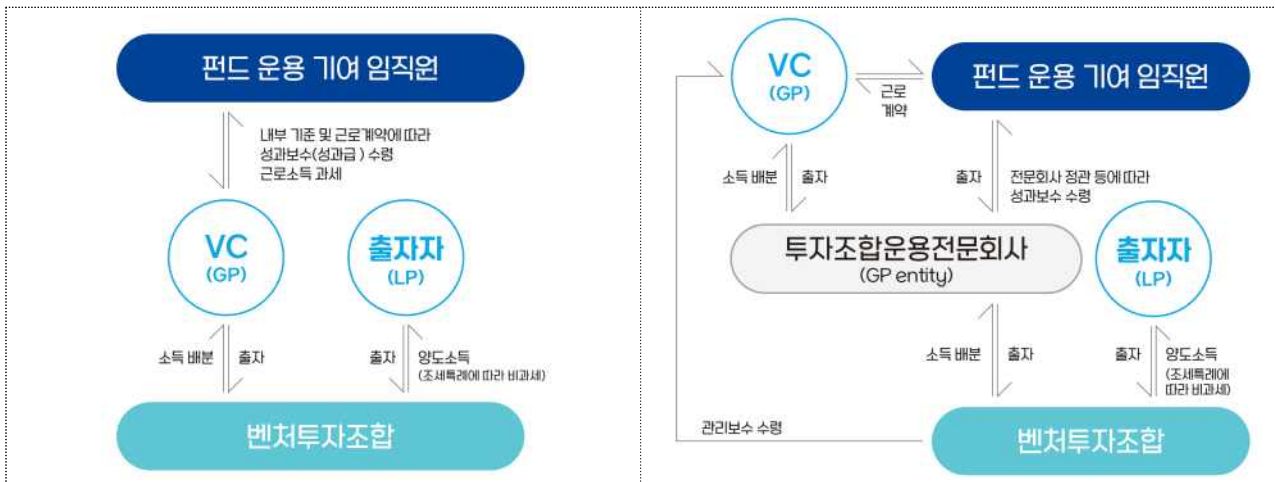
1 VC 임·직원의 운용성과 기여도 명확화, VC와 투자조합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GP Entity) 도입(벤처투자법 개정, '26)

* VC 1곳이 벤처투자조합 다수의 GP가 되는 대신, VC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각각 1개의 벤처투자조합 GP를 맡는 구조

- VC의 운용 편의를 위해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없이 VC가 벤처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기존 방식)하는 경우도 허용

2 펀드 핵심운용역 등 주요 임·직원이 펀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손익분배를 출자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참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벤처투자 주체별 소득 흐름 변화 >



4 벤처형 근로시간제도 연구 시작

● 파괴적 혁신과 도전·성장이 빠르게 전개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특정 임·직원(스톡옵션 부여자 등)에 적합한 유연근로시간 제도 연구 시작

현장의 목소리

“벤처기업 재직자 70% 이상이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 가능” (벤처기업협회, '25.10.21.), “최근 실리콘밸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 근무제가 확산 중”(조선일보, '25.10.9)

(3) 대한민국 벤처 정신 부활의 원년 : 기업가정신의 국가 전방위 확산

① 국가 벤처혁신 컨트롤타워 공식화

- ① 국가AI전략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벤처·스타트업 AI 확산 협의체' 신설 추진(AI전략위 협조)
 - AI 기술 자체를 핵심 사업 모델로 삼는 파괴적 혁신기업을 찾고 성장 장벽을 발굴·제거하는 역할 수행
- ② 국회·정부·업계가 참여하는 ^{가칭}벤처스타트업 포럼 정례화
 - '26년부터 벤처·스타트업 전문가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회·정부·업계의 소통을 강화하고 벤처 친화적 제도·법을 발굴

② 기업가정신 및 벤처문화(Pay it forward)를 국가 전체로 확산 벤처기업협회 추진

< 벤처문화(Pay it forward) 종합포털 신설 >

- ① 벤처기업 업종·산업별 이슈 대응 및 문제해결 플랫폼, 벤처 정신 아카이브, 선·후배 네트워킹 등을 위한 종합포털 신설 ('26년)
- ② 정규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교과서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벤처투자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세대의 벤처생태계 접근성 강화
- ③ 모태펀드 투자를 통해 성장한 선배 벤처기업·창업가가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후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멘토링 연계 지원

< 벤처주간 신설 및 벤처 명예의 전당(아너스 클럽) 신설 >

- ④ 벤처주간을 통해 주요 성과를 집중 홍보하고, 대한민국 벤처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벤처인 명예의 전당' 신설 ('26~)
 - * 매년 벤처 업계로부터 후보군을 추천받아 연말 창업·벤처유공 행사시 '벤처인 명예의 전당' 입성 관련 부대 행사 추진

< 벤처천억기업 브랜드화 (^{가칭}벤처 마일스톤 클럽) >

- ⑤ 벤처·스타트업의 매출 1,000억원 달성 의미를 '데스벨리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단계에 진입했음을 공인하는 첫 이정표'로 재정의

전략 4 모험자본 체질 개선과 벤처투자 글로벌 4강 달성

◆ 민관의 역량과 자원을 총결집해 「모험 투자자」가 이끄는 年 40조원 벤처투자 시장을 열고 진정한 모험자본과 벤처금융의 시대 개막

(1) 벤처투자 자원 확대 : K-벤처에 풍부한 유동성 공급

1 모태펀드 2.0 시대 : 모두의 투자 플랫폼 본격화

< 모태펀드 투자자원 확충 및 다변화 >

① 연기금·퇴직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모태펀드에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과감히 위험손실 부담(26)

* (現) 10개 부처가 19개 계정에 재정 출자 → (改) 연기금 등이 출자하는 '국민계정' 추가

- 민·관 여유자금의 국민계정을 통해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중진계정)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 기존 모태펀드 : 재정 마중물 공급 > < 모태펀드 2.0 : '모두의 투자 플랫폼' >



② 재정 출자 확대^① 및 존속기간 연장^②을 통한 플랫폼 역할 강화

* ① 전부처 모태펀드 예산(조원): ('25) 1.0 → ('26) 1.6 (+58%)

② 「벤처투자법」 개정('25.12, 현행 존속기간 30년을 10년 단위로 연장 허용)

③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 '모태펀드 운용위원회'^① 신설, '운용 성과 공시제도'^② 도입 등 관리체계 고도화(기재부 협조)

* ① 중기부 중심으로 소 출자부처 및 기재부 참여, 총 출자규모 및 분야별 투자계획 사전협의

② 청산 수익률, 계정별·기간별 투자 및 회수현황 등 운용 현황 및 성과 정례 공개(年 1회)

- 중소·벤처기업 육성 목적의 정책펀드 신설 시 모태펀드를 활용하고,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투자대상 확대* 검토

* 예: 중소기업 외 투자 허용, 대·중견기업 공동 제작 프로젝트 투자대상 확대 등

② 법정기금과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허용 · 확대

① 법정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근거^①를 정비('25.12)하고, 벤처투자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대폭 강화방안^② 마련(기재부 협조, '26.1Q)

① 모든 법정기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근거 마련(기존 44개, 벤처투자법 개정 완료)

② (現) 기금 여유자산 대비 벤처투자 참여 실적에 따라 기금운용평가 가점 최대 1점 부여

② 퇴직연금의 벤처 공모펀드(BDC) 투자와 함께 모태펀드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한 투자 방안 참여 검토(노동부 협조, '26)

* 예시) ① 우선손실충당(손실 발생 시 가입자 손실의 일정 비율 충당), ②풋옵션(가입자가 환매를 희망시 원금+이자 환급), ③초과수익 이전(초과수익 일정 비율 공유)

- 업계 의견 수렴(중기부-고용부 공동),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방식 등 벤처투자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26)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위한 퇴직급여법령 개정 추진('27)

③ 국외자금의 국내 벤처펀드 참여 촉진

① 글로벌펀드 內 수시 전략 출자사업을 신설하여 글로벌 대형 VC, 국부펀드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

* (현행) 통상 1년에 1회 출자 공고를 통해 일괄 참여 신청을 받아 심사·출자
(개선) KVIC 해외사무소에서 글로벌 대형 VC, 해외 유력 엑셀러레이터, 국부펀드 등 대상으로 사전에 펀드결성 수요 확인, 이후 준비하여 수시 출자신청

- 대형·우수 투자자 유치에 출자금액 확대(평균 10M\$ → 최대 50M\$)

②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26.下, 싱가포르)하여 글로벌 자금유치 추진

* VCC 인가 획득('26.上) → 모펀드 설립('26.下) → '27년까지 2억 달러 규모 조성

- 글로벌 금융허브에 모펀드를 신설하고, 국내 VC는 하위펀드로 참여하여 모태펀드 출자를 마중물로 외자 유치

* 싱가포르 VCC 제도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해외 투자자 선호

- 하위 펀드는 국내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 하거나, 국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펀드로 운용

③ '벤처투자 외환센터'를 통한 논스톱 국내 벤처투자 지원

- 해외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시 복잡한 외환·행정절차*로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벤처투자 외환센터' 개소('25.11)

* 예: 투자금액·지분율에 따라 KOTRA·한국은행·외국환은행 등으로 신고기관 상이

- 법무법인, 외국환은행 등 민간과 협업하여 해외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관련 외국환신고를 일괄 대행 지원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 벤처·스타트업이 주인공인 자본 생태계

① (금융자본) 규제를 벤처투자 친화적으로 개편 금융위 협조

① (은행)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위험가중치 기준 개편 시 업계 예측가능성 제고를 고려하여 추진

* 정책펀드 100% 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 요건 명확화, 금융당국·정책금융기관 정례 협의 등

- 상생금융지수* 도입 시 벤처투자·출자 실적 반영(동반위 협조)

* 중소기업 대출 상위 6대 은행 시범 도입('26년, 기업·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 향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은행권 전체로 확대

② (증권사) 모험자본 의무 투자가 벤처·중소기업 성장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만큼 모험자본(중소·중견기업 대출, 주식투자 등) 공급 의무화 (~'28년까지 단계적 추진), A등급 채권 중견기업 투자는 모험자본 의무공급액의 최대 30%까지 인정

- 증권사(대형IB·중기특화)의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① 및 증권사·VC·유망기업 간 교류 확대^② 추진

* ①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액 중 벤처투자 지원비중 점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② 모태펀드 투자기업, 기보 기술평가 DB 등 유망기업 Pool 공유, 공동 IR 개최 등

③ (BDC)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26.3월 시행)으로 일반 국민이 혁신·벤처기업에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접근성 제고

- BDC 운용사 인가 시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인 자(금투협회 교육 이수)를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 추진(최대 2명, 입법예고 중)

② (산업자본) 대 · 증권기업의 전략적 투자 유도

- ① 외부자금 모집^①, 해외투자 규제 완화 등 운용 자율성 확대로 대기업의 신규 CVC 설립 유인 제고^② 및 기존 CVC 활성화(공정위 협조, 공정거래법 개정)
 - * ① 예시 : (現) 펀드별 40% 이내 → (改)펀드별 50% 이내 또는 펀드총액 40% 이내
 - ② 벤처투자법(또는 여신금융법) 및 공정거래법 중첩 적용에 따른 규제 부담 등으로 지주회사 체제 기업은 국내 CVC 보다 해외 VC 설립을 선호하는 경향 존재
- ② 법인이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벤처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공동운용사(Co-GP) 자격 제한적* 허용(벤처투자법령 개정)
 - * CVC 규제 우회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 뒤 제도 개선 추진
- ③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국내·외 대기업이 스타트업 지분투자 시, 매칭 투자(최대 40억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 신규 조성

(3) 민간투자 촉진과 벤처금융 확대 : 투명하고 공정한 모험자본 인프라

① 민간투자 촉진 세제 인센티브 강화 기재부 협조

- ①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을 완화(7년 이내 → 10년 이내)하여 스케일업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 적용
 - * 최근 3년간 업력별 벤처투자 비중 : (~7년) 62%, (7~10년) 17%, (10년 초과) 21%

< 적용 대상 벤처투자 촉진 세제 >

구분	행위 주체	투자 대상	행위	혜택	세부 요건
①개인 소득공제	모든 개인	창업·벤처 기업 등	인수	투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벤처기업등에 대한 신주 투자 또는 펀드 출자일 일 것
②법인 세액공제	VC 및 기금운용법인 외의 내국법인			투자금액의 5~8% 세액공제	<u>설립 7년 이내 기업</u>
③양도차익 비과세	개인, VC 및 기금운용법인		매도	주식 매각시 양도차익 비과세	<u>등에 대한 신주 투자일 것</u>

※ (행위 주체)가 (투자 대상)의 주식등을 (행위)한 경우, (혜택)부여

② 법인 출자자가 벤처펀드를 통해 동일 기업에 후속 투자하는 경우를 고려, 특수관계인(비소액주주 지분율) 적정 요건* 검토

* (現)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법인 출자자가 피투자기업의 특수관계인(비소액주주)에 해당되어 벤처투자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

< 참고: 후속투자 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펀드가 특정 기업에 후속 투자	출자한 복수의 펀드가 동일 기업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자(2)법인은 ②에 따른 벤처투자 법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출자자(2)법인은 ④에 따른 벤처투자 법인 세액공제 적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자(법인은) ③에 따른 벤처투자 법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출자자(법인은) ⑤에 따른 벤처투자 법인 세액공제 적용 불가

③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도 투자조합이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25.12 개정완료)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로 자기자본의 400%까지 차입 가능

-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펀드 출자자 대상 법인 세액공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적용
- 투자목적회사(SPC)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이중과세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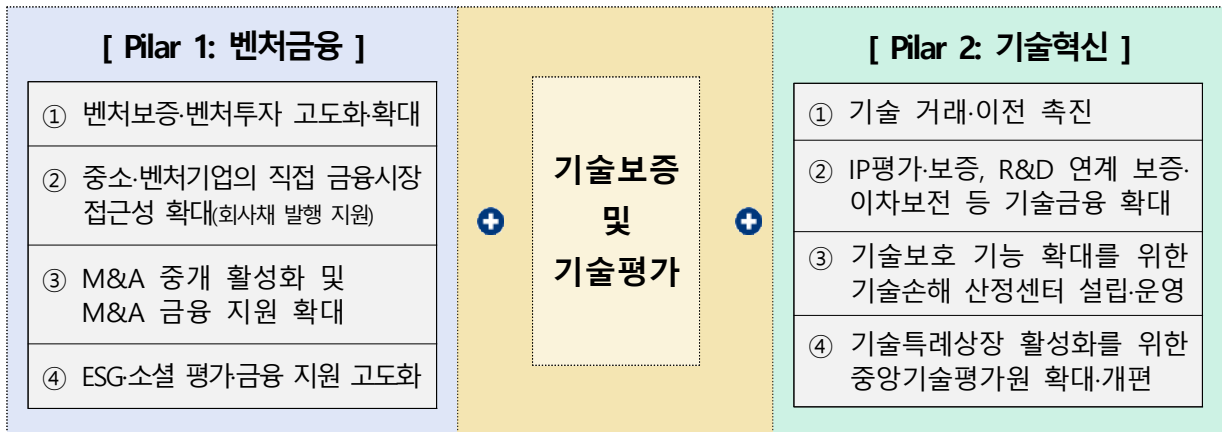
④ 법인이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출자한 경우 세액공제율 확대* ('25.12 개정완료)

* 벤처모펀드 : (現) 5% + 3개년 평균 초과분의 3% → (改) 5%+초과분의 5%(개정 완료)

2 기술보증기금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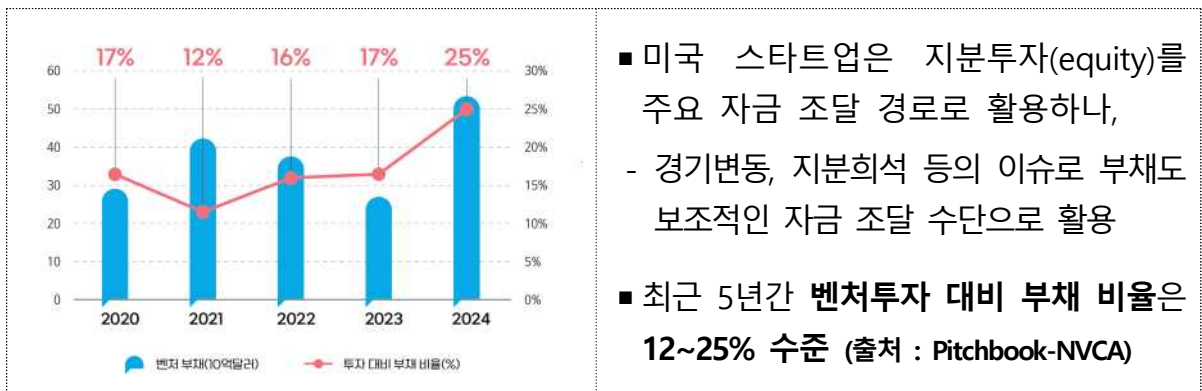
- 1 기술보증 중심에서 벤처보증·투자·M&A 등 벤처금융과 기술평가·거래·보호 등 기술혁신을 종합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보 기능 강화

< 기술보증기금 기능 강화(안) >



- 2 투자유치 이력 기반으로 공급하는 벤처보증(투자연계보증)을 확대하고 ('25. 0.3조원→'30. 1조원), 보증 한도도 상향(200억원→500억원, '25.12)

<참고 : 美 벤처투자받은 기업의 부채 추이 및 벤처투자 대비 비율>



- 3 기술사업화를 위한 IP 보증 확대('25. 0.6조원→'30. 1조원), 후기기업의 직접금융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동화 보증(P-CBO) 확대
- 4 직접투자는 초기·지방기업 등 시장보완영역 중심으로 수행하고, 권리 행사 및 주식 처분 방식에 관한 기준 개편('26.1Q)

3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 근절

< 선제적 관리 체계 마련 >

- ① '부당행위 신고센터 법제화'를 추진하여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VC의 부당행위 파악·예방 지원 (벤처투자법 개정, '26~)
- ② 벤처기업·VC·법률가 등 "가칭 스타트업 지원 포럼"을 구성하고 불공정 투자 관행 발굴 등 투자계약 관련 의견* 청취 (반기별, '26~)
* 글로벌 표준과 상이한 불공정 조항, 벤처투자법규, 모태펀드 기준규약 및 표준계약서 개정 소요 등
- ③ 공정한 투자계약에 대한 VC 준수여부를 자율규제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 및 모태출자 우대 (벤처캐피탈협회 협조)

< VC 내부통제 및 감독기반 강화 >

- ④ VC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강화^① 및 교육 이수^②(연 1회) 의무화(벤처투자회사 등록·관리규정 개정, '26~)
* ① 투자심사 및 조합 운용 업무 수행자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과 준법감시인 겸직 금지
② 벤처투자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변화, 이해상충 사례 및 최신 판례 등 (VC협회 협조)
- ⑤ 중기부 본부·지방청에 벤처투자 관리·감독 전담인력을 배치('26~)하여, 벤처투자 확대에 따른 감독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 벤처투자 관리·감독 선진화 체계(안) >



4 벤처금융 데이터 인프라 강화

< 벤처·스타트업 자금조달 모니터링 고도화 >

① (부채: Debt) 벤처기업과 벤처투자받은 기업의 민간·공공부문별 대출 신규 취급 및 잔액 규모를 파악*(벤처기업법 개정, '26~)

* 「벤처기업법」에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정보 수집 근거 마련 요

② (투자: Equity) 분기별 벤처투자 트렌드 분석자료(^{가칭}벤처투자 포커스) 발간, 벤처투자종합포털(VICS) 내 투자 정보 공개범위 확대 검토

- 초기 벤처·스타트업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창업기획자·개인투자 조합과 법인 직접투자*도 벤처투자 모니터링 범위에 추가('26~)

* 법인투자 세액공제 신청 시 지방중기청으로부터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개선 검토

-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창업기획자(AC) 투자 통계 업무를 창업진흥원에서 민간(AC협회)으로 이양(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6.상)

< 비상장 벤처기업·벤처투자유치기업의 자금조달 모니터링 시스템(안) >

구분	세부 항목			
부채 (Debt)	간접금융 <공공부문>			직접금융 회사채 발행 등 벤처 펀드가 인수한 CB·BW 등
	기술보증기금 보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등	기타 정책금융기관 보증·융자		
	간접금융 <민간부문>			
	은행 대출 등		제2금융권(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대출 등	
투자 (Equity)	직접금융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투자	신기사 및 신기조합 투자	개인·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 투자	일반법인 직접 투자

※ : 기존 모니터링 범위, : 추가되는 모니터링 범위, : 모니터링 범위 밖

< 벤처기업 BSI 국가통계 승인 >

③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게 조사*를 설계하여 벤처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분기별로 파악(~'26.1Q 국가통계 승인 목표)

* 벤처투자 유치 전망, IT·SW 인력상황 전망 등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표 구성

(4) 혁신투자 선순환 구조 :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역동적 생태계

①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 고도화 및 지원 확대

① 「기보 중소·벤처기업 M&A 지원 플랫폼*」 확대·고도화

* M&A 자문중개기관과 협력, 수요발굴부터 자문중개·금융까지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 대학·협회·시중은행 등과 협업하여 M&A 수요발굴 및 플랫폼 유입을 확대하고 중개기관(M&A 파트너스) 확대*(~'25.12)

* (現) 회계법인(삼일삼정 등) 및 중소형 컨설팅사 등 15개사 → (改) 20개사로 확대

- 지역 대한상의와 협력하여 회원사의 M&A 수요 발굴 및 매칭 지원

② M&A 목적 펀드·보증 공급 확대

- (펀드)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M&A 펀드' 지속 공급(~'30)

- (보증) M&A 추진 인수기업 대상으로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M&A 보증 범위* 및 공급 확대('25. 300억원 → '30년 2,000억원)

* (기존) 기술혁신형 M&A 보증(최대 200억원), 기업승계형 M&A 보증(최대 100억원)
+ (신설) 벤처투자조합 인수목적 SPC형 M&A 보증(최대 500억원)

③ CVC 투자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출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될 경우 지분 처분의무 유예기한 부여(現 즉시 처분 의무,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6~)

④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기술가치 금액 산정 평가기관에 회계·감평법인 등 민간기관 추가(기재부 협조,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26~)

* 피인수법인의 특허권, 저작권 등 기술가치 금액의 5%를 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⑤ M&A 추진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컨설팅·평가·실사 비용 지원 범위* 및 지원 규모 확대('25. 15개사 → '26. 40개사 내외)

* (現)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 (改) 기업가치평가비용 외 재무사업환경 등 각종 기업실사 (Due Diligence) 비용, 합병후 통합 자문(PMI) 비용도 일부 지원(40~60% 수준)

⑥ 「가칭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업승계특별법」을 제정하고,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특례 등 기업승계형 M&A 종합지원 체계 구축('26~)

2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 ①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일반 세컨더리, LP지분유동화, 컨티뉴에이션 펀드 등 다양한 유형의 세컨더리 펀드 확대 조성 추진('26~)

< 세컨더리 펀드의 유형 >

구분	세부 내용
일반 세컨더리 (Direct Second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드의 피투자기업 지분 중 특정 기업의 지분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한국에서 가장 보편적)
LP 지분 유동화 (LP-led Second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드의 특정 LP(펀드 출자자)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펀드로 조기회수가 필요한 LP 지분을 선택적으로 회수 가능
컨티뉴에이션 펀드 (GP-led Second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펀드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LP와 신규 LP를 유지하여 운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북미에서 보편적)

- ②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한 벤처투자조합에 의한 세컨더리 투자에도 주식 양도차의 비과세 적용(기재부 협조)

* △벤처투자회사가 GP로 참여, △기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벤처기업 신주를 최초로 이전
△기존 벤처투자조합과 세컨더리목적의 벤처투자조합 간 투자대상의 동일성 유지(모두 만족 要)

- ③ 시장에서 컨티뉴에이션 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표준 지침 마련('26)
- ④ 모태펀드가 출자한 모든 벤처펀드가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한시적 주목적 투자로 인정 (최대 20%, '25~'30년)하여 구주투자 촉진
- ⑤ 세컨더리 수요·공급 투자사, 스타트업을 이어주는 'Closed IR'을 확대 운영하여 수요기반 거래 촉진

* (현행)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 운영('25. 분기별 2회 내외)
(개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하여 권역별·산업별 특화 운영(예: 충북인천·강원센터- 제약바이오 분야 공동 Closed-IR), 모태펀드가 출자한 세컨더리펀드 운용사 참여 등

VI.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전략 1) 기술의 혁신을 넘어 유니콘·빅테크 도약		
① K-빅테크 성장 트랙 : AI 고속도로를 타고 유니콘·데카콘 도약		
압도적 GPU 인프라 등으로 AI 스타트업 1만개사 육성	중기부·과기정통부	'26. ~ '30.
유니콘·데카콘 50개 육성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 가동	중기부·금융위	'25. ~ '30.
AI·딥테크 친화적으로 창업·R&D·보증 프로그램 고도화	중기부	'26. ~
AI·딥테크 친화적으로 세제·제도 개편	중기부·기재부	'26. ~
② B2B·B2G 신시장 개척 : 혁신벤처 성과를 산업·공공시장이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B2B)	중기부	'26. ~
벤처·스타트업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B2G)	중기부	'26. ~
지역 제조 AX·DX 수요 창출(B2B)	중기부	'26. ~
③ K-벤처의 글로벌 진출 : 글로벌 무대로 국내외 한인 벤처·스타트업 연결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국내 거점 확대	중기부·과기정통부	'26. ~
글로벌 한인 창업가·경제인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중기부	'26. ~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 강화	중기부·과기정통부	'26. ~
④ 벤처 솔루션 매니저 : 법률·경영·규제 해결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운영	중기부	'25.12 ~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중기부	'26.1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중기부	'26. ~
(전략 2) 지역과 사회 곳곳으로 혁신의 포용성 확대		
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창업 지원 : 도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재도전 안전망		
재도전 응원본부 신설	중기부	'26. ~
재도전 펀드 확대·개편	중기부	'26. ~
가칭 재창업·재기지원 보증 신설(기보)	중기부	'26. ~
벤처투자 연대책임 개선	중기부·금융위	'26. ~
② 로컬벤처 혁신 거점 고도화 : 지역의 벤처·창업 공간 업그레이드		
5극 3특을 고려 창업도시 10곳 내외 조성	중기부	'26. ~
비수도권 스타트업 SW·HW 인프라 확산	중기부	'26. ~
③ 지역·초기투자 토양 개척 : 지역·초기투자 마중물 조성 및 규제 완화		
3.5조원 규모 '지역성장펀드' 신설	중기부	'26. ~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 기반 조성	중기부·기재부	'26. ~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공급 확대	중기부	'26. ~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 규제 완화	중기부	'26. ~
④ 소셜벤처 르네상스 :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며 혁신의 물결 확산		
소셜벤처 개념 재정립 및 글로벌 위상 제고	중기부	'25.12 ~
임팩트 펀드·보증 확대	중기부	'26. ~
팁스 프로그램 내 ESG 부문 신설	중기부	'26. ~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전략 3) 제도·문화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를 벤처생태계로 흡수		
① 성장 지향적 벤처 정책 구현 : K-벤처 위상을 끌어올리는 제도 혁신		
벤처 정책의 범위 확장	중기부	'26. ~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	중기부벤처기업협회	~'26.상
복수의결권 주식 활성화 논의	중기부·금융위	'26. ~
벤처·스타트업 플립(Flip)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기부	'26. ~
벤처·스타트업 법률 분쟁 리스크 완화	중기부	'26. ~
② 글로벌 인재 중심국 도약 : 세계 최고의 기술인재가 모여드는 생태계 조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중기부	'26. ~
벤처 스튜디오 모델 활성화	중기부	'26. ~
AI 솔루션 기반 1인·소형(솔로프리너) 창업모델 활성화	중기부	'26.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중기부	'25.4Q~
국내 복귀 AI 인재 세금 지원	기재부	'26. ~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	중기부	'26.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 제도 활성화	중기부	'26. ~
벤처·스타트업과 전문연구요원간 인재 매칭데이 운영	중기부벤처기업협회	'26. ~
우수인재의 VC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기부	'26. ~
벤처형 근로시간제도 연구 시작	중기부	'26. ~
③ 대한민국 벤처 정신 부활의 원년 : 기업가정신의 국가 전방위적 확대		
국가 벤처혁신 컨트롤타워 공식화	중기부·AI전략위	'26. ~
벤처주간 신설 및 벤처 명예의 전당(아너스 클럽) 신설	중기부벤처기업협회	'26. ~
벤처천역기업 브랜드화 (가칭벤처마일스톤 클럽)	중기부벤처기업협회	'26. ~
벤처문화(Pay it forward) 종합포털 신설	중기부벤처기업협회	'26. ~
(전략 4) 모험자본 체질 개선과 벤처투자 글로벌 4강 달성		
① 벤처투자 재원 확대 : K-벤처에 풍부한 유동성 공급		
모태펀드 투자재원 확충 및 다변화	중기부·기재부	'26. ~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기재부·중기부	'26.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점진적 허용	노동부·중기부	'26. ~
국외자금의 국내 벤처펀드 참여 촉진	중기부	'26. ~
② 생산적 금융 대전환 : 벤처·스타트업이 주인공인 자본 생태계		
금융자본 규제를 벤처투자 친화적으로 개편	금융위·중기부	'26. ~
산업자본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 유도	공정위·중기부	'26. ~
③ 민간투자 촉진과 벤처금융 확대 : 투명하고 공정한 모험자본 인프라		
민간 투자촉진 세제 인센티브 강화	기재부	'26. ~
기술보증기금 기능 강화	중기부	'26. ~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 마련	중기부벤처기업협회	'26. ~
VC 내부통제 및 감독기반 강화	중기부	'26. ~
벤처·스타트업 자금조달 모니터링 고도화	중기부·기재부	'26. ~
벤처기업 BSI 국가통계 승인	중기부	~26.1Q
④ 혁신투자 선순환 구조 :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역동 생태계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 고도화 및 지원 확대	중기부·기재부	'26. ~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중기부·기재부	'26. ~